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이진원 · 김준섭 · 이지영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이진원 · 김준섭 · 이지영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일본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8,000원

ISBN 978-89-8479-698-0 9334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통일연구원
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서울시립대학교
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황 병 덕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팀장)	김 국 신 명예연구위원 김 규 룬 소장/선임연구위원 박 영 호 선임연구위원 여 인 곤 선임연구위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이 기 현 부연구위원 전 병 곤 소장/선임연구위원 조 한 범 선임연구위원 강 동 완 교수(동아대) 김 갑 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 현 택 교수(한국외대) 박 인 휘 교수(이화여대) 서 동 주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 상 진 교수(광운대) 양 현 모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전 동 진 교수(신라대) 정 기 응 책임연구위원(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최 용 환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한 인 택 연구위원(제주평화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이 진 원 교수	김 준 섭 교수(국방대) 이 지 영 전임연구위원(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목차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김준섭·이지영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가. 연구 범위	5
나. 연구 방법	6
II. 일본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7
1. 일본의 공공외교 수용과 발전	9
가. 일본의 외교 목표와 특성	9
나. 일본의 공공외교 수용 과정과 추진 배경	11
2. 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14
가. 일본 외교의 추진체계	14
나.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17
3. 사례연구	27
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28
나. 조어도(센카쿠제도) 문제	35
4. 일본의 공공외교 특성과 평가	40
가. 일본 공공외교의 특성	40
나. 일본 공공외교의 성과와 한계	43
III. 일본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49
1.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입장과 정책	51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51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정책	58

목차

2.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63
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필요성	63
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75
다.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내용	84
3. 일본 공공외교 및 한반도 통일관련 전문가 인식조사	95
가. 일본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95
나. 일본 공공외교 현황	98
다.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현황	105
라. 한반도 인식으로 본 일본 공공외교의 전망	113
마. 일본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27
IV. 결론	131
1.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성	133
가. 일본 공공외교의 체제 및 운영	133
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139
2.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시사점	149
3. 대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과제	155
참고문헌	15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3

표목차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김준섭·이지영

<표 II-1> 일본 외무성의 조직과 기구	15
<표 II-2> 일본 국내외 공공외교 행위자	18
<표 III-1>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가?	57
<표 III-2>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66
<표 III-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국가	66
<표 III-4>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조직도	79
<표 III-5> 2011년도 ‘구출하는 회’ 전국협의회 결산보고	80
<표 III-6> 국가별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99
<표 III-7> 국가별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103
<표 III-8> 국가별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비교	105
<표 III-9> 한국인의 호감도 평가	109
<표 III-10> 자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	111
<표 IV-1>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성	133
<표 IV-2> 일본 공공외교의 체계와 운영	135
<표 IV-3>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144
<표 IV-4>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공공외교 주요 자산	147
<표 IV-5>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시사점	149
<표 IV-6> 대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과제	155

그림목차

<그림 III-1> 소속 기관	95
<그림 III-2> 업무 경력	96
<그림 III-3>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98
<그림 III-4> 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99
<그림 III-5>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100
<그림 III-6>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101
<그림 III-7>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101
<그림 III-8> 일본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비중	102
<그림 III-9> 일본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103
<그림 III-10> 일본 공공외교의 실제 시행 여부	104
<그림 III-11> 일본 공공외교의 성과 평가	104
<그림 III-12>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여부 평가	106
<그림 III-13>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주요 수행기관	107
<그림 III-14>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목표	108
<그림 III-15>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의 공공외교 대상	108
<그림 III-16>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109
<그림 III-17>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	110
<그림 III-18> 일본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12
<그림 III-19> 일본의 주장(일본인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12
<그림 III-20> 한반도 통일 예상 시기	113
<그림 III-21>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 형태	114

<그림 III-22>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한 입장	114
<그림 III-23>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유	115
<그림 III-24>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	115
<그림 III-25>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급변 가능성	116
<그림 III-26>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 형태	116
<그림 III-27> 일본이 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의 대비	117
<그림 III-28> 일본이 수행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	117
<그림 III-29>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국가	118
<그림 III-30>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	119
<그림 III-31> 한국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	119
<그림 III-32> 북한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	120
<그림 III-33> 한국인들의 예상에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이미지에의 동의 여부	120
<그림 III-34> 한국인의 반일 감정 정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121
<그림 III-35> 재일 한국인 차별에 대한 한국인 인식에의 동의 여부	122
<그림 III-36> 재일 한국인 차별 관련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한 한국인 인식	123
<그림 III-37> 일본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정도	123

그림목차

<그림 III-38>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공공외교 효과 정도	124
<그림 III-39>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한국인 대상 활동과 예상 효과	125
<그림 III-40> 동일본 대지진의 풍평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한 공공외교의 효과	126
<그림 III-41> 한국인의 반일감정 완화를 위한 일본의 공공외교 프로그램과 그 효과	127
<그림 IV-1>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공공외교 주요 목표	147
<그림 IV-2> 상대국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	154



I 서론

1. 연구 목적

일본은 한반도 주변 4대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냉전시대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대 진영인 북한, 중국, 소련(러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왔으며, 자국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대북한·대중국·대소련(러시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즉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왔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냉전이 붕괴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체제 운영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및 일본과는 다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책적 협조관계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시장경제체제를 거부하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북한 정책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협조체제는 국제정치 환경 이외의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뒤틀어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 국민들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감정의 골은 매우 깊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일본의 보수 언론과 인사들의 망언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불만과 불신 감정은 악화되어 양국은 협조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 이후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I

II

III

IV

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열도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일본 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세계적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자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외교정책과 방식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냉전시대에 외교정책의 주요 주체였던 국가와 주요 수단이었던 정치적 영향력은 냉전의 붕괴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그 위치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국가 간 또는 사회 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통한 관계의 설정과 발전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도 소프트파워, 문화외교로 대표되는 공공외교(일본에서는 Public Diplomacy라는 용어를 사용)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종전부터 전개해 오던 공공외교를 확대 발전시키고 다양한 공공외교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공공외교 현상을 체계 및 운영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특히 대한반도 통일외교에 대한 공공외교의 실태를 이론적인 측면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공공외교의 방향 및 틀을 정립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정책을 전통적 외교 이외에 공공외교의 측면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일본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의 기초 및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양국 국민 전체의 상호 인식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 주제와 범위가 매우 넓어 공공외교, 특히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의 공공외교 현상을 체계 및 운영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본이 공공외교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일본 외교의 목표와 특징, 수용과정과 추진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의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존의 외교 추진체계와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의 공공외교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외교 문제의 하나인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입장과 정책을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특이성과 사례를 통해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좀 더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일본의 전반적인 공공외교에 대한 현황,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

II

III

IV

나. 연구 방법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역사 및 현황을 일본 정부 발표 자료와 관련 연구 논문 및 서적을 통해 분석하고, 일본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관련 외교정책의 내용을 일본 정부 자료와 이를 분석한 연구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공공외교 전문가, 실무자, 한일관계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보완할 내용이나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을 국내정치, 대외정치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의 연구내용 및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일본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공공외교 및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일본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1. 일본의 공공외교 수용과 발전

가. 일본의 외교 목표와 특성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일본 국민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를 외교의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의 일본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전전의 일본은 군사력에 의존한 팽창을 우선시하는 군국주의 국가로서, 외교에 있어서도 군사력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전후 일본은 헌법 제9조 등의 제약¹⁾에 의해 전전과 같이 군사력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미일동맹에 기본적인 안전보장을 의존하며,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어떠한 군사적인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통상(通商) 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전후 일본외교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일본의 외교 노선을 이 노선의 기본적인 틀을 만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 이름 따서 ‘요시다노선’이라고 부른다. ‘요시다노선’은 1990년 냉전이 종식되기까지의 일본 외교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²⁾

그런데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 ‘요시다노선’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요시다노선’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 1990년에서 1991년에 걸쳐서 벌어진 제1차 걸프위기와 걸프전이다. 이때 미국은 그때까지 일본에 요구하

¹⁾ ‘일본국헌법’은 패전 후 연합군 점령 하에서 1947년 제정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상징천 황제와 전쟁포기 조항의 채택에 있다. 제9조 1항은 전쟁포기 조항으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전투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 조항으로,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투력을 보유, 유지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포기와 전투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명기한 세계 유일의 헌법으로 일본의 헌법은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우며 전후 일본의 평화외교의 전제가 되고 있다.

²⁾ Kenneth B. Pyle, *Japan Rising* (New York: Public Affairs, 2007), pp. 241~277.

지 않았던 새로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인적 공헌’이었다. 실질적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로 인하여 ‘요시다노선’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자위대를 해외에 보내게 되면, 이는 국제질서 형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요시다노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요시다노선’의 기반이 되고 있는 미일동맹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 ‘인적 공헌’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서 우여곡절을 거친 후 결국 자위대 파병 대신에 총 13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하게 되지만, 걸프전이 끝난 후 쿠웨이트 정부가 ‘워싱턴포스트’지에 자국을 지원한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게재한 광고에 일본은 빠져 있었고, 그것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³

이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은 ‘요시다노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교 노선을 모색하게 되고, 그 새로운 방향은 결국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형성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일본의 외교 노선에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 1996년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미일안보공동선언’이었으며, 이 미일안보공동선언에 기초하여 1997년의 신 가이드라인, 1999년의 주변사태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은 ‘요시다노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그 뒤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세계안보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에 발맞춰서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유사법제를 제정함으로써 스스로의 군사력에 더욱 더 자유를 부여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의 대두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오랫동안 안보정책의 기본개념이었던 ‘기반적 방위력’에서 탈피하여 ‘동적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기반적 방위력’이 동서가 대치하는 냉전시 대라는 환경 속에서 방위력의 존재에 의한 억지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³ 다나카 아키히코, 이원덕 옮김,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중심, 2002), p. 301.

것에 반해, ‘동적 방위력’은 군사력을 보다 능동적으로 운용하여 침략 가능성을 사전에 제어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동적 방위력’은 수동적인 일본의 기존 외교·안보정책인 ‘전수방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⁴

나. 일본의 공공외교 수용 과정과 추진 배경

우리는 Public Diplomacy를 공공외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일본어 역어(譯語)를 사용하지 않고, 외래어로서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미카미 다카노리(三上貴教)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⁵

퍼블릭 디플로머시로서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외교정책 및 각 연구의 성과를 고려하여, 일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공보, 공개, 공공’외교라고 하는 3개의 접두어가 필요하다. 공보외교라고 할 때에는 외교정책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활동, 즉 정보발신의 전략적 전개가 함의되어 있다. 공개외교라고 할 때에는 외교가 널리 열려 있다는 것, 정보공개를 중시하여 비밀외교와 대극에 위치하는 외교를 나타낸다. 그리고 공공외교는 관과 시민이 함께 있는 외교를 시사한다. 그러나 ‘공보, 공개, 공공’외교라고 하는 번역이 정착할 개연성이 높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3개의 접두어를 붙이는 것보다는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다만 이 공공외교가 일본에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그 용법에 상당한

⁴ 김준섭, “일본의 유사법제의 성립과 동북아 안보,” 『日本學報』, 제60집 (한국일본학회, 2004), pp. 547~563.

⁵ 三上貴教,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研究の射程,” 『修道法学』, 27卷 2号 (修道大學, 2007), pp. 5~6.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외무성은 이라크 정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시민외교’라고 하는 역어를 사용했으며, 2003년 4월 21일의 마이니치신문 기사에서는 ‘공중(公衆)외교’라는 용어를 퍼블릭 디플로머시의 역어로서 쓰고 있다. 또한 2000년 1월 20일의 마이니치신문은 “국민과 함께 걷는 외교,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행하고 싶다”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참의원의원의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에 대한 공보의 의미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999년 4월 21일의 기사는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국내에서는 외교정책에 관한 여론의 지지를 추구하고, 국외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1999년 4월 13일의 아사히신문 기사는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에 대해 여론의 이해를 구하는 것, 대외적으로는 상대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자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999년 2월 24일의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미국 특유의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굳이 번역한다면 ‘여론외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어느 정도 혼란스러웠던 공공외교의 개념이 정리되고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라고 하는 외래어가 정착된 것은 외무성이 이 개념에 관심을 기울이며 본격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점을 두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로는 2003년 발행된 ‘새로운 시대의 외교와 국제교류의 새로운 역할: 세계여론 형성에의 일본의 본격적 참가를 지향하여’라는 보고서를 들 수 있다. 2002년, 외무성 소관의 특수법인인 국제교류기금이 기획한 이 연구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는 저명한 평론가이

⁶ 위의 글, pp. 12~14.

자 당시 도아대학(東亞大學) 총장이었던 야마자키 마사카즈(山崎正和)를 좌장으로 하며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분 료세이(國分良成), 다나가 아키히코(田中明彦)와 같은 대표적인 정치학자들이 있다. 2003년 4월에 발간한 최종보고서인 「새로운 시대의 외교와 국제교류의 새로운 역할: 세계여론 형성에의 일본의 본격적 참가를 지향하여」는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일본 공공외교의 과제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이 보고서에서는 IT혁명의 실현,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존재, 글로벌 미디어의 발달 등에 의한 세계적인 정보공유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세계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중권력(People's Power)이 외교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국내여론의 방향성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외교정책을 보다 제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의 주요한 오피니언 메이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저변에 존재하는 각국의 '퍼블릭(公衆)'에 대하여 일본의 생각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설명하는 공공외교(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공공외교의 강화에 있어서 단기적·직접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공보의 강화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육성이나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조합하여 세계여론을 담당하는 오피니언리더 층이나 CSO 네트워크에 일본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실상 세계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매스미디어와 논단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공공외교는 종래형의 정책공보로는 커버할 수 없는 광범한 층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그 형태도 공보만이 아니라, 인적·지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하는 인물교류와 과제해결형의 대화·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게 되는데, 국제교류기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공공외교를 추진

I

II

III

IV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⁷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 10월에 국제교류기금은 특수법인에서 독립행정법인으로 개편되면서 보다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공공외교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이듬해인 2004년 8월에는 외무성의 기구개혁에 의해 대외공보와 국제문화교류가 부분적으로 재통합되어, 공보문화교류부로 신설되었다. 이 공보문화교류부의 영어명이 Public Diplomacy Department라는 점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교청서』에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2004년의 일이었다. 거기에는 “구미 각국에서도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 각국의 국민여론에 대해 자국의 매력을 이용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퍼블릭 디플로머시(대여론외교, 혹은 대시민외교)가 주목되어, 실천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⁸

2. 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가. 일본 외교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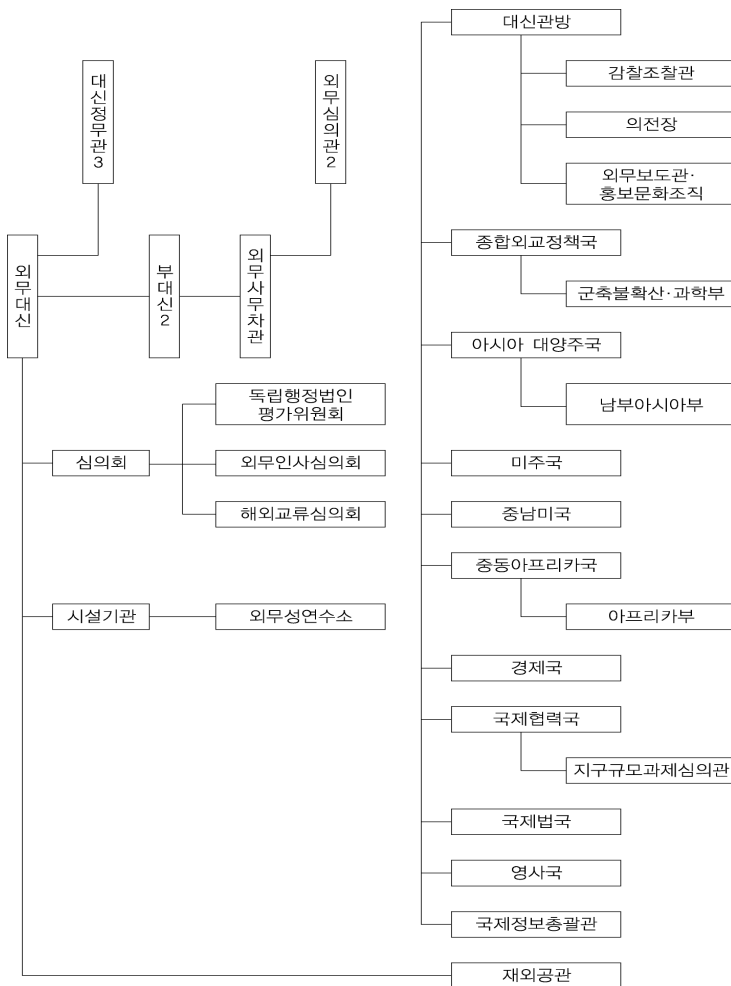
일본 외교 추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무성의 조직은 대신관방과 10국, 3부를 가진 본성과 세계 각지에 있는 대사관, 정부대표부 등 204개의 재외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무성 전체에 관한 사무를 하는 종합외교정책국을 제외한 국은 지역별로 5개의 지역국(아시아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과 담당할 사항에 따라 4개의 기능국(경제, 국제협력, 국제법, 영사)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보수집분석을 행하는 국제정보통괄

⁷ 国際交流研究会, 『新時代の外交と国際交流の新たな役割』(東京: 国際交流研究会, 2003), pp. 1~37.

⁸ 外務省, 『平成16年版外交青書』(東京: 外務省, 2004), p. 205.

관이 설치되어 있다. 대신관방 아래에는 감찰조찰관, 의전장, 외무보도관·홍보문화조직 등이, 종합외교정책국의 아래에는 군축불확산·과학부, 아시아대양주국의 아래에는 남부아시아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재외공관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정부대표부 등이 있는데, 현재 약 3,5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대신관방과 주요 국의 임무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일본 외무성의 조직과 기구



출처: 日本外務省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nnai/honsho/sosiki/index.html>>.

I
II
III
IV

• **대신관방(大臣官房)**

대신관방은 외무성의 각 부국과 재외공관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외무성 전체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재외공관과의 통신, 기밀, 재외공관직원의 근무환경 정비와 외빈, 재일외교단 대상의 의전도 대신관방이 담당한다.

• **종합외교정책국**

종합외교정책국은 일본이 직면하는 과제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각 지역별 정책을 외무성 차원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장·테러정책, 긴급사태에의 대응, 유엔·인권·국제적 조직범죄, 우주에 관한 외교정책의 책정과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 **아시아대양주(大洋州)국**

아시아대양주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가 깊은 아시아대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평화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이 지역과 정치, 안전보장, 경제, 개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하고, 한국·중국·ASEAN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다.

• **북미국**

북미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담당하는데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후 미일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관계가 일본외교의 기축이기 때문이다. 북미국은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범죄, 테러, 환경, 대량파괴무기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도 협력한다는 관점에서 미국과의 신뢰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미일 양국의 안정적 발전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구주(歐洲)국

구주국은 유럽 국가들과 EU, NATO 등을 담당하며 각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속히 통합을 확대, 심화하고 있는 EU와 경제, 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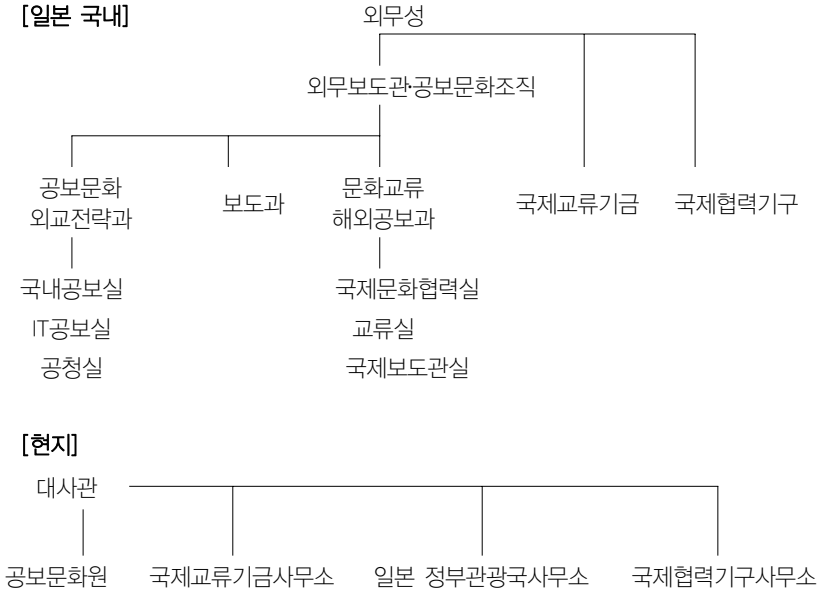
나.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1) 행위자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독립행정법인⁹ NGO와 연계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본 국내는 외무성 대신관방 하에 설치된 외무보도관과 공보문화조직이 국제교류기금과 함께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대상국 현지에서는 해외공관과 그 산하 공보문화원이 국제교류기금현지사무소, 일본 정부관광국현지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⁹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은 1970년대 영국의 대차 정권이 단행한 정부조직의 외청화를 모델로 1990년대 후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내각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인 성청(省庁)에서 독립한 법인조직으로서 독립행정법인은 행정을 담당하고 공공의 견지에서 국가의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 및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표 II-2〉 일본 국내외 공공외교 행위자



(가) 정부

• 외무성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

일본은 2004년 8월에 외무성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대외공보를 담당하는 부서와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함으로써 공보문화교류부(Public Diplomacy Department)를 설치했다. 외무성과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문화교류를 외교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화하여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기구 개편과 동시에 외무성과 국제교류기금의 역할 분담도 이루어져, 외무성 공보문화교류부가 중장기 목표설정 및 대외문화교류 전략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실시는 국제교류기금으로 이관되었다.¹⁰ 외무성 공보문화교류부는 2012년 8월에 다시 보도조직과 통합되

¹⁰ 정기웅·윤석상, “일본 공공외교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안보전략연구소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 152.

어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Press Secretary / Director-General for Press and Public Diplomacy)으로 재정비되었다. 이는 보도기능 강화를 통해 대외발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일본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공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은 공보문화외교전략과, 보도과, 문화교류해외공보과의 3과로 구성되어 있고 공보문화과는 국내공보실, IT공보실, 공청실의 3실, 문화교류해외공보과는 국제문화협력실, 교류실, 국제보도관실의 3실을 각각 산하에 두고 있다.

•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쿨재팬실

외무성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이 일본의 공공외교에 있어 문화교류와 공보 관련 역할을 담당한다면 일본 문화의 상품화와 경제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의 쿨재팬(Cool Japan)실이다. 쿨재팬실은 미디어콘텐츠, 관광, 지역산품 등의 해외 전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11월 쿨재팬관민유식자회의를 설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는 2011년에 「새로운 일본의 창조-「문화와 산업」 「일본과 해외」를 연계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제언을 발표했다.¹¹

• 해외공관의 공보문화원

공보문화원은 해외공관의 부속시설로서 공보,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현지인에게 일본의 일반사정과 정책을 테마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각종 일본 소개 자료의 열람, 조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J-POP, CD, DVD, 잡지,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일본의 현대문화 발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¹¹ クールジャパン官民有識者会議, 『新しい日本の創造-「文化と産業」 「日本と海外」をつなぐために』(経済産業省, 2011.5.12).

(나) 독립행정법인

• 국제교류기금

일본 정부가 국제문화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반발과 비난이 높아짐으로써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주된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1971년 닉슨쇼크는 특히 미일 간 상호 신뢰관계에 충격을 주었고 일본이 국제문화교류와 대외공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문화교류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후쿠다(福田) 외무장관은 대미문화교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문화교류기관 설립에 관한 검토를 지시, 1972년 10월 국제교류기금법에 의해 인적 교류, 일본어 보급, 일본연구 진흥, 국제교류 이벤트 실시와 지원, 일본 문화 소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발족되었다.¹² 국제교류기금은 2003년에 독립행정법인이 되었고 일본 공공외교의 추진 기관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국제교류기금의 목적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하여 일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세계에 공헌함으로써 더 좋은 국제환경을 정비하고 일본의 조화로운 대외관계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¹³ 국제교류기금의 공공외교 대상 지역도 설립 초기의 미국,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태평양, 중동지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아시아를 중시하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은 현재 21개국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9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다.¹⁴

¹² 정기웅·윤석상, “일본 공공외교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협력기구 중심으로,” p. 147.

¹³ 獨立行政法人國際交流基金法 제3조.

¹⁴ 國際交流基金 홈페이지, <<http://www.jpfa.go.jp/j/>> (검색일: 2012.6.30).

• 국제협력기구

1974년 일본의 ODA 실시기관으로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는 2003년에 독립행정법인이 되어 공공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원조하는 것이 국제협력기구의 목적이지만 개발뿐만 아니라 원조를 통한 환경보전, 민주주의의 공고화, 인간안보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협력기구는 일본 공공외교의 협력기구로서 전후 일본의 국제공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22개국, 태평양지역 9개국, 북미·중남미 22개국, 아프리카 26개국, 중동 9개국, 유럽 4개국 총 92개국에 현지 사무소가 설치되어있다.¹⁵

• 일본 정부관광국

일본 정부관광국¹⁶은 1946년 일본교통공사로 시작하여 1960년에 국제관광협회가 발족, 1965년에 국제관광진흥협회로 재정비되었고 2003년에는 독립행정법인 일본 정부관광국으로 이행해왔다. 이러한 일본 정부관광국의 목적은 해외에서의 일본관광 선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 및 외국인관광객의 일본방문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관광을 진흥하는 것이다.¹⁷ 최근에는 관광입국을 지향하며 2003년부터 실시된 비ジット 재팬(Visit Japan) 사업에 공헌하고 관광을 통한 경제발전, 국제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10개국 13개 도시에 현지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¹⁸

¹⁵ 國際協力機構 홈페이지, <<http://www.jica.go.jp>> (검색일: 2012.10.2).

¹⁶ 공식명칭은 국제관광진흥기구이나, 2008년부터 통칭으로 일본 정부관광국을 사용하고 있다.

¹⁷ 獨立行政法人國際觀光振興機構法 제3조.

¹⁸ 日本政府觀光局 홈페이지, <<http://www.jnto.go.jp/jpn/>> (검색일: 2012.6.30).

(다) NGO

• **일본국제볼런티어센터(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JVC)**

1980년에 발족된 NGO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남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한 등에서 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 지원, 분쟁 발생 시 난민 지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JVC는 정치적 불안과 도시와 농촌 간 경제 격차로 농민의 대다수가 빈민인 이들 국가에서 유기농 농법에 의한 농가의 생계 지원, 정보센터를 통한 농업과 농업 개발에 관한 자료와 기술 보급, 초등학교 교육 지원, 아이들의 영양 개선 지원, 분쟁과 재해 발생 지역의 식량 지원, 복구 지원을 전개해왔다. 한편 JVC는 일본 국내에서 현지 상황을 전달하고 현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ODA가 현지에 적합한 형태로 실시되도록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JVC의 활동은 일차적으로는 인간안보의 확대와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본인들의 국제 공헌의 실질적 사례로서 평화국가 일본,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선진국 일본, 인권 옹호 국가 일본이라는 이미지의 확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 **국제일본어보급협회(Association for Japanese-Language Teaching: AJALT)**

1977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010년에 공익사단법인이 되었다. AJALT는 21세기 새로운 다문화 공생사회를 지향하며 일본어 교육을 통해 일본과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해 전 세계인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AJALT는 국내에서는 외국인 비즈니스 관계자, 대사관원, 학술연구자, 기술연수생, 난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일본어 교육을 기획,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에 직결되는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85년 이후 매년 현직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연수강좌를 개최하여 일본어 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

로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AJALT는 지역사회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국제이해강좌나 이문화교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한편 해외 일본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어 교사가 부족하게 되자, AJALT는 중등교육·대학·민간 일본어 교육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1987년 이래 미국·호주·영국·태국·싱가포르에서 교사연수회를 개최하여 일본어 교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AJALT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 사회와 일본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지일파(知日派) 육성에 기여해왔다.

(2) 자원과 수단

(가) ODA

1954년 콜롬보플랜(Colombo Plan)¹⁹가입과 미얀마에 대한 전후배상으로 시작된 일본의 ODA는 국제 공헌을 통해 국익을 실현하는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헌법과 요시다 노선으로 군사력과 국제적인 무력활동에의 개입에 제한이 있었던 일본은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부흥, 지역규모의 과제 해결에 공헌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 평가나 신뢰,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ODA의 양적 확대와 지원 형태의 다양화를 꾀하며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198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조국으로 등장했으며 1993년부터 1999년까지 8년 간 최대 원조국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ODA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본은 1992년 ‘정부개발원조대강(ODA대강)’을 결정했는데,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과의 상호의존성 인식, 환경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3년에는 ODA

¹⁹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50년에 발족한 국제기구.

대강이 개정되어 아시아 지역이 중점 지원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ASEAN 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일본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1997년부터 원조예산 이 삭감되어 일본의 ODA는 감소기에 접어들었으나, 2009년 현재 ODA 총액은 8,854억 엔으로 세계 5위이다. 지역별 지원 규모는 아시아가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미주와 아프리카·중동·오세아 니아·유럽의 순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²⁰ 일 본은 이러한 ODA를 통해 일본의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역량 강화를 추진 해왔다.

(나) 공공외교정책

일본 공공외교의 구체적 수단인 공공외교정책은 2006년 외무성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해외교류심의회가 2년간의 심의를 거쳐 2008년에 발 표한 『일본의 발신력 강화를 위한 시책과 체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 서에는 시민 차원의 교류와 이해 촉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미래 지향적 인 청소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다. 시민·청 소년 교류와 이해 촉진을 위해 애니메이션, 만화, 디자인, 패션 등 일본의 현대 문화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하에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화 교류, 일본어 보급, 일본 연구·지적 교류, 일본 관광 촉진이 그것이다.²¹

• 문화교류

일본의 공공외교는 1990년대까지는 주로 대미, 대유럽을 중심으로 무역

²⁰ 國際協力機構, 『國際協力機構年報 2009』, (東京: 國際協力機構, 2009), pp. 27~30.

²¹ 海外交流新議會答申, 『我が国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施策と体制』(東京: 外務省, 2008), p. 19.

마찰에 기인한 일본 이미지 악화에 대응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대두하게 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문화외교를 표방하면서 동아시아를 중점 대상지역으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문화교류를 전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²²

• 일본어 보급

일본은 공공외교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기초가 되는 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일본어 보급에 주력해왔다. 일본어 보급의 기본방침은 일본을 이해하는 요소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중시하는 것이다. 현재 43개국과 116개 지역에 일본어 중핵 거점이 형성되어 있고 1979년 12만 명이던 해외 일본어 학습자 수가 2009년 현재 365만 명으로 약 30배 증가하였다. 일본어 능력시험 수험자 수도 1984년 7천명에서 2010년 현재 61만 명으로 25년간 약 87배나 증가하였다.²³

• 일본 연구·지적 교류

일본 연구·지적 교류의 목적은 지일파 육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국가, 지역별 과제를 특정하여 사업전략과 방침을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중장기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거점기관을 지원하며, 세 번째 단계는 장기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고 일본 공공외교의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지적 공헌 역시 일본연구·지적교류의 목적이다.

²² 文化外交推進に関する懇談会, 『「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東京: 首相官邸, 2005), pp. 20~21.

²³ 国際交流基金, 『国際交流基金資料』(東京: 国際交流基金, 2012), p. 3.

특히 아시아를 대상으로 일본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²⁴

• 일본 관광 촉진

일본 관광이 공공외교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된 것은 최근으로 관광 입국을 지향하며, 2003년부터 비지트재팬 사업을 실시하여 관광을 통한 경제발전과 일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일본관광을 산업화하여 경기회복의 견인차로 삼는다는 신성장전략에 따라 비지트재팬 사업은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인, 중국인의 일본 관광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²⁵

(3) 유형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 역할에 따라서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유형을 분류한다면, 정부가 공공외교를 주도하는 정부주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공공외교가 전통외교에 비해 수행 주체가 다양화되고 수행과정이 개방적이지만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NGO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외무보도관과 공보문화조직, 현지에서는 공보문화원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ODA의 계획 수립과 집행, 평가에 NGO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공외교의 자원과 수단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본 현대문화를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NGO의 참여 기회가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 추진체계는 향후 정부 후원, 민간 집행 모델로 이행할 전망이다.

²⁴ 國際交流基金 홈페이지, <<http://www.jpf.go.jp/j/>> (검색일: 2012.6.30).

²⁵ 2012년 5월 24일 일본정경사회학회에서 일본관광국서울사무소 정연범 소장이 발표한 내용에서 인용.

3. 사례연구

전후 평화헌법과 요시다노선 하에 통상국가로서 공공외교를 전개하며 국제 공헌과 일본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온 일본이지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역사 문제가 일본 공공외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양자 간 평화조약으로 전후 처리가 종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특히 한일·중일 간에는 역사인식·교과서·영토·일본군 위안부(이하 위안부) 등 다양한 역사 문제가 남아있고,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은 지속적인 ODA 지원과 일본어, 일본 문화 전파를 통해 지일파를 육성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국가,’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일본 이미지와 불신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²⁶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공공외교를 펼쳐왔으며 일정한 효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이 기존의 신중한 태도에서 강경한 태도로 선화하면서 한일, 중일 간에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고 일본의 국익이 저해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위안부 문제와 센카쿠제도 문제를 살펴보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외교는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센카쿠제도 문제는 중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어떠한 공공외교를 추진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²⁶ 星山隆, “日本外交と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 『IIPS Policy Paper 334.J』(東京: IIPS, 2008), p. 19.

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공외교의 시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공외교는 이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 발족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자 증언을 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을 때에도,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위안부에 대한 전후 보상과 법적 해결은 종결된 것으로 주장하며, 외교적 사안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대협이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소, 유엔이 전시 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면서 일본은 외교적 사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위안부 문제가 아시아 국가와의 역사 문제라는 범주를 넘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일본이 여성의 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지 않는 폭력국가의 이미지가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2) 고노담화와 국민기금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표명하고, 1992년 7월과 1993년 8월 2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공표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이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밝혔다.²⁷ 이 고노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있어서 일본군의 직·간접적 관여를 인정하고, 특히 위안부의 모집에 있

²⁷ 外務省, 『慰安不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施策 平成19年4月』, (外務省, 2007),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ianfu.html>> (검색일: 2012.10.2).

어서 ‘관현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사실도 있었다’라고 하여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²⁸

한편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면서 1993년 세계인권회의 빈선언에는 ‘무력분쟁 상황 아래서 행해진 여성의 인권 침해는 국제 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강제 임신을 포함한 이러한 종류의 인권 침해는 모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음해인 1994년 6월 ‘개발과 여성 아시아태평양양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자카르타선언에도 군사 분쟁 하에서의 조직적 강간에 대한 비판, 범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11월에는 유엔법률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양국 간 협정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며 일본 정부는 피해 회복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제출했다.

일본은 ‘조직적 강간’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각 선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1994년 12월 ‘전후 50년 국회결의’를 통해 일본의 전후 전쟁 책임을 성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는 침략 전쟁의 반성에 대한 부분은 취약하지만, 침략적 행위와 식민지 지배가 행했던 근대에 일본도 그러한 행위를 하여 아시아 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한다는 요지이다. 국회 결의 이후 무라이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수상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러한 국회 결의와 무라이마담화를 통해 1995년 7월에 발족된 것이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다. 국민기금은 어디까지나 민간 기금으로 국가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다.²⁹

²⁸ 조양현, “동아시아 역사전쟁과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논의,” 『한일민족문제연구』, 제524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p. 106.

²⁹ 스즈키 유코, “국민기금 문제란 무엇인가,” (제1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 한일모임 발표

일본은 일관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도의적 책임 하에 국민기금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수행한다는 방침으로 국민기금의 운영 경비 전액을 부담하고 모금 활동을 지원했다. 국민기금은 6억 엔의 모금을 자원으로 한국, 필리핀, 대만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인당 200만 엔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2006년에 해산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국민기금에 대해 추진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어 논쟁이 뜨거웠지만 국민기금의 회장을 역임했던 도쿄대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는 “국회결의와 결의 이후 발표된 무라야마다담화는 일본이 처음으로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는 입장에 선 것”이라며 이로써 과거의 문제를 상호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한다. 와다 교수는 이러한 정치적 성과를 기반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후 인식을 일본 사회 내부로 넓혀가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기금이 전후 역사 청산을 위해 부족하지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여기고 있다.³⁰

와다 교수의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일본 정부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담화와 국민기금의 대대적인 공보에 나선다. 국민기금의 모금액은 6억엔이었지만 국민기금의 광고, 선전, 운영에 일본 정부가 70억엔을 지원한 것이다. 일본은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관과 미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보에 나섰다. 공보의 내용은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 문제를 종결지었으며 고노담화로 정부차원의 공식 사죄를 하였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기금을 창설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학계, 언론의 참여를 이끌어내 전 국민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담화 형태의 사죄와 민간기금인 국민기금을 인정하지

논문, 2008), pp. 9~12.

³⁰ 와다 하루키, “아시아여성기금문제와 지식인의 책임,” (한일연대21 제2회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5년 12월 2일), 2005.

않았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본 정부를 통렬히 비판한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의 공식적 해결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대유엔, 대미 공공외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서 일본의 조치들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Positive Steps)’로 평가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특별조사관 쿠와라 스와미의 1998년 보고서는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성노예제는 국제 인도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피해여성에게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에 6개 항목의 권고를 제안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할 만한 노력(Welcome Effort)’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³¹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NGO의 활동을 배경으로 미 하원에서도 여성인권,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1996년 이래 6차례에 걸쳐 민주당의 레인 에반스(Lane Evans)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제출해왔으나 본회의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일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고노담화와 국민기금을 통해 이미 충분히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보상하였다는 논리가 미 행정부 및 공화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제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대일 이미지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미일관계에의 파장을 우려해 그 당시 미국 의회가 일본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³²

그러나 한국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과 공식 해결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지금까지 고노담화와 국민기금을 바탕으로 신중히 공공외교를 펼치며 자국의 노력을 어필해오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

³¹ 外務省, 『慰安不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施策 平成19年4月』(東京: 外務省, 2007).

³² 조양현, “동아시아 역사논쟁과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논의,” p. 118.

어나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외교가 설득력을 상실하면서 미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결의안은 통과되었다.

(3)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미 하원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외교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일본이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고노담화, 국회결의, 무라야마담화 등 연이은 침략전쟁과 위안부 문제의 군 개입 인정에 대한 일본 내 보수세력의 반발이 있다. 고노담화에 반대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유주의사관을 이론적 근거로 ‘공정한 사실에 근거한 역사관의 확립’이라는 기치 하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7년에 결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역사인식의 토대이기도 한 자유주의 사관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동경재판 사관’이나 일본의 과거사를 정당화하는 ‘대동아 전쟁 사관’이 아닌 제3의 선택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자유주의 사관의 특징은 천황제 전통의 계승, 국가주의적 가치관의 부활, 동경재판에 대한 비난, 난징사건 및 위안부 문제의 축소·부정, 침략 및 식민지배의 정당화이다. 자민당 보수 의원들의 ‘중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소장파 의원 모임’, ‘밝은 일본·국회의원연맹’ 등의 활동을 통해 새역모를 지원하며 고노담화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보수 세력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 과거사 조명의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아베(安倍) 수상은 ‘중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의 사무국장 대리를 역임했으며,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소장파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서 고노담화의 철회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자민당 내에서는

고노담화의 재검토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1월 다시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상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일본은 대응책의 일환으로 고노담화 수정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즉, 일본 정부 스스로 위안부 문제에 관여를 인정한 것이 계속 결의안 발의의 근거가 된다는 인식 하에 고노담화의 수정 요구가 본격화되었다.³³

2007년 3월 1일 아베 수상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며 사실상 고노담화의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아베 수상의 이 발언은 미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발을 초래하여 위안부 문제가 미일 간의 쟁점이 되었다. 아베 수상은 또한 강제성과 관련하여 일본 관헌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끌고 나가는 등의 ‘협력의 강제성’과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있었다는 ‘광의의 강제성’을 구분하며 강제성의 정의가 협의에서 광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당시 방일 중이던 존 네그로 폰테(John Negroponte)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가장 개탄스러운 사건이며 당시 일들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미국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아베 또한 미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사죄하지 않을 것이며 결의안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함으로써 결의안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시퍼(Thomas Scieffer) 주일 미국 대사는 일본의 일부 지도자가 위안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며 고노담화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파멸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의 예상 밖의 강경 대응에 아베 수상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다.

일본이 미국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유력 로비스트를

³³ 위의 글, p. 107.

고용하여 미 공화당 의원들을 집중 공략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 우호적으로 알려진 데이너 로라바커(Dana Rohrabacher)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이미 공식 사과하였으므로 결의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아베 수상의 고노담화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결의안 지지로 돌아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결의안 지지 여론이 확산되었다. 워싱턴포스트지(2007.3.24)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납치문제에 대해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아베 수상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뉴욕타임즈(2007.3.26), LA타임즈(2007.3.27), 월스트리트저널(2007.3.28) 등 기타 주요 언론 역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다.³⁴ 그러나 아베 수상이 고노담화 계승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결의안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되자, 2007년 6월 26일 일본 의원 40여 명은 워싱턴포스트지에 일본군 위안부에는 강압이 없었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합리성이 결여된 행동에 나섰다.

결국 2007년 1월 민주당 주도로 새로 구성된 제110대 미 의회에서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위안부 결의안이 7월 3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위안부 제도를 그 잔혹함과 규모에 있어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미 하원의 의지로서 일본 정부에 대해 공식 사죄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등 과거의 결의안들에 비해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혼다 의원은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결의안의 목적이 결코 미일동맹의 훼손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과거사 해결을 통한 지역 안정에의 공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⁵ 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공식 문서로 남게 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³⁴ 위의 글, p. 117.

³⁵ KACE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 <<http://kace.org>> (검색일: 2012.10.2).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과 충돌하고, 신중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를 추진하지 않으면, 일본의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과 국익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조어도(센카쿠제도) 문제³⁶

(1) 일본의 실효 지배

일본은 센카쿠제도에 대해 1895년 무주지 선점에 의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효지배를 해오고 있다. 1945년 패전으로 일본이 미군의 점령통치를 받을 때에도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미국의 관할 하에 두도록 로비를 했고 1972년 오키나와를 반환받으면서 센카쿠제도의 관할권을 인도받았다.³⁷ 1971년 미일 간 오키나와반환협정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대만이 각각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시작하였다. 1968년에 유엔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가 해양조사를 실시하여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해오고 있다.³⁸

(2) 현상 유지 방식과 영토분쟁의 회피

1971년 중국은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이후 20여 년간 중일 간에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중일 국교 회복 시 주은래는 “센카쿠제도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말하고

³⁶ 조어도에 대한 명칭은 중국에서는 다오위다위군도, 일본에서는 센카쿠제도라고 한다. 본고는 일본의 외교의 입장을 논하는 것으로 일본 명칭인 센카쿠제도라는 명칭을 주로 쓰기로 한다.

³⁷ 최장근, “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토전략,”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p. 263.

³⁸ 星山隆, 『21世紀日本外交の課題』 (東京: 創風社, 2008), p. 37.

싶지 않다”고 했으며,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 비준서 교환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등소평은 센카쿠문제를 다음 세대에 미뤄두자고 제안하며 중국 어선에 의한 센카쿠제도 수역 침입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현상 유지에 중일 간 암묵적 이해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영토문제를 능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의 신정책 아래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경제 발전에 전념하였고 일본은 ODA를 통해 이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양국은 센카쿠제도 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울 이유가 없었다.³⁹

1970년대 중일 우호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일본의 지원으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고, 일본은 중국의 개방노선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중국 지원에는 국교정상화 당시 중국이 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중국에 대한 ODA 지원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93년 이후 최대 지원 대상국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ODA 지원에 있어 중국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⁰

일본은 중국을 지원하면서 냉전 하에서 지역 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센카쿠제도 문제가 영토 분쟁화되는 것을 회피, 현상 유지하면서 실효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일본은 ‘센카쿠제도의 날’을 지정하는 한편 센카쿠제도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관리하면서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해상보안청 소속의 순시선을 상시 배치하여 외국 선박의 수역 침범과 불법 상륙을 경계해왔다. 그러면서도 센카쿠제도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일본청년사’라는 우익단체의 등대설치나 상륙 활동은 묵인하였다. 1988년 센카쿠제도 상륙

³⁹ 이명찬, “일중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해양연구』, 제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2), p. 61.

⁴⁰ 毛利和子, 『日中關係』 (東京: 岩波新書, 2006), pp. 108~114.

1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청년사가 센카쿠제도 가운데 조어도에 새로운 등대를 건설하고 항로표식법에 근거한 정식 등대로 인가 받기 위해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외무성이 최종 인가를 반대하였다. 일본청년사는 외무성이 친중파로 채워져 중국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연약한 외교를 벌인다고 비판했으나, 일본 정부는 민간이 설치한 등대로 인해 원만한 중일관계가 외교적 마찰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8월 4일에 마이니치신문이 일본청년사의 새로운 등대에 대해 연재하자, 외무성은 섬 주민의 어업상 필요하다는 형식으로 등대를 허가했다. 이는 중국의 항의를 의식하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최대한 중국과의 충돌은 피하면서 표면상 들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⁴¹

(3) 센카쿠제도의 영토분쟁화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부터 센카쿠제도는 양국 간에 정치문제로 무게를 더하다가, 2010년 중국 어선의 영해 침입과 그 처리를 둘러싸고 영토분쟁화되었다. 최초의 계기는 1992년 2월 제7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이 ‘타이완 및 조어도를 포함한 부속도서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도서이다’라고 명문화한 것이다. 2004년 3월 조어도에 상륙한 중국인 7명이 오키나와현 경찰에 체포되어 나하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는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강제송환이라는 형식으로 중국에 돌려보내졌다. 2008년 12월에는 중국의 해양조사선 2척이 센카쿠제도 해역을 9시간 동안 항행하며 일본 순시선의 경고와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조어도 수역에 한 시간 정도 정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9월 7일 센카쿠제도 주변 바다에서 일본 순시선과

⁴¹ 최장근, “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토전략,” pp. 246~247.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충돌 사건을 중국 어선에 의한 의도적인 해상보안관의 출입검사 방해로 보고 현장에서 선장을 공무 집행방해로 체포하였다. 중국은 9월 16일까지 9일간 다섯 차례나 주중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여덟 차례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센카쿠제도 문제의 현상 유지라는 양국 간의 암묵적 양해는 깨진 것이다.

중국은 일본 경제에 압력을 가하며 외환시장에서의 엔고 유도·일본 관공역제·중국내 일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연·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허베이성 내의 군사관리구역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인 4명을 구속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압력에 선장을 석방하였고, 석방 이유로 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과 중일관계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의원 43명은 “이번 결말은 청일전쟁 후의 삼국간섭에 필적하는 국난”이라고 정의하며, 정부의 조치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일본 정부가 임해야 할 긴급 과제에 대해 기술한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건백서」는 센카쿠 사태를 “대두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게을리 하고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불합리한 도전을 거부하는 단호한 자세가 부족했던 지금까지의 일본정치가 부른 위기”라고 언급하며, 센카쿠제도에 대한 등대 설치와 경비 강화 및 주변 해역에서의 미일합동군사훈련의 조기 실시를 주장하였다.⁴²

일본 언론도 ‘중일관계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외교적 표현에 비판을 쏟아냈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언론은 한국·중국·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일본을 몰아붙인다고 하며, 바보취급 당하고 있는 일본이 취해야 할 영토 정책은 상대국에 할 말은 의연하게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초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⁴³ 전후 평화헌법과 요시다

⁴² 이명찬, “일중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pp. 55~56.

⁴³ 위의 글, p. 58.

노선으로 군사력에 제한이 있었던 일본은 통상국가로서의 길을 걸으며 경제력과 비군사적 자원을 동원해 공공외교를 펼쳐왔으나, 경제력에 그들이 드리워지고 공공외교의 자원과 수단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초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4월 16일 미국을 방문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도지사는 도쿄도가 조어도, 북서도, 남서도 3개 섬을 사이타마현 주재의 지권자로부터 매입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구입자금으로 모금을 촉구하여 9월 11일까지 14억 7,327만엔이 모였다.⁴⁴ 8월 19일에는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가 일반 참가자를 모집, 조어도에 상륙하여 일본 국기를 걸고 2시간 정도 체제하였다.⁴⁵ 9월 11일 일본 정부는 조어도, 북서도, 남서도를 지권자로부터 20억 5,000만엔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국유화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국유화의 이유로 이시하라 도지사의 도쿄도에 의한 구매계획을 저지하고, 일본의 실효지배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억제하며, 센카쿠제도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밝혔다.⁴⁶ 그러나 중국의 50개 도시에서는 일본의 국유화에 반발하며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가 이어졌다. 각지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일본대사관에 투석하고, 도요타자동차나 닛산자동차 판매점, 일본 음식점을 파괴하기도 했다.⁴⁷ 중국외교부는 9월 16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일 중간선을 넘어 오키나와 트래프까지로 하는 대륙붕 자연연장안을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발표했다.⁴⁸

센카쿠제도 문제에 대한 일본 공공외교는 과거에는 센카쿠제도를 현상

44 『産経新聞』, 2012년 9월 13일.

45 『産経新聞』, 2012년 8월 19일.

46 『産経ニュース』, 2012년 9월 12일.

47 『時事通信』, 2012년 9월 15일.

48 『讀賣新聞』, 2012년 9월 16일.

유지하고 영토분쟁화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게 일본의 실효 지배를 장기적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이러한 신중한 현상 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강경 일변도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처는 일본의 국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센카쿠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공외교도 위안부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며, 일본 공공외교에 있어서 대아시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일본의 공공외교 특성과 평가

가. 일본 공공외교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공공외교의 특성은 경제 중시, 문화 중시, 공보 중시, NGO와의 협력 강조라고 할 수 있다.

• 경제 중시

일본은 ODA 실시에 있어서 국가전략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개발과 산업육성, 그리고 일본의 산업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제 실익형 ODA 전략'을 추진해왔다. ODA의 약 50%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왔는데, 이는 80년대 이후 일본의 생산네트워크 형성 및 확대 등의 경제적 이익 증대, 안정된 해양 교통로 확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공급원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침은 2010년 '신성장전략'과 함께 발표된 ODA대강의 개정안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신성장전략의 핵심 내용은 환경,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일본의 경제 발전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ODA대강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클재팬에서도 경제성이 증시되어 한국과 중국이 클재팬의 주요 시장으로 선정되고 2009년 107천억 엔에서 2020년 156천억 엔으로 시장규모를 4% 신장시킨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현지 일본대사관 공보 문화원을 중심으로 국제교류기금사무소, 일본 정부관광국사무소와 민간이 연계한 현지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⁴⁹

• 문화 증시

패전 후 일본은 전범국의 이미지를 씻고 국제사회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1968년 문화청을 발족하면서 문화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공공외교에서 일본 문화, 특히 J-POP,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현대 문화를 중시하게 된 것은 1972년 국제교류기금이 설립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12월, 일본은 국제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을 일본 외교의 중점적 추진 요소로 격상시키고 지역연구와 지적교류를 통해 외교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문화외교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2005년 7월에 발표된 이 간담회의 보고서는 일본 국제 문화 교류의 목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 촉진과 이미지 향상, 분쟁 회피를 위한 이(異)문화 간 상호 이해와 신뢰 향상, 전 인류의 공통의 가치와 이념 육성에의 공헌을 들고 있다. 또한 문화교류에 있어서 일본 문화의 발신뿐만 아니라 이문화의 수용과 상호 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가치관의 공생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⁴⁹ クールジャパン官民有識者会議提言, 『新しい日本の創造-「文化と産業」 「日本と海外」をつなぐために』, pp. 15~16.

⁵⁰ 정기웅·윤석상, “일본 공공외교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협력기구를 중심으로,” pp. 150~153.

• 공보 중시

일본 공공외교의 가장 큰 특성은 일본 외무성이 공공외교와 공보문화외교를 거의 동일한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04년 설립된 공보문화교류부의 영어명칭은 ‘Public Diplomacy Department’였다. 또한 외무성은 올해 1월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일본의 공공외교 전체의 전략 책정을 어떻게 주도하여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전문가를 포함시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간담회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은 ‘공보문화외교의 바람직한 제도화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이며 제1회 회의 제목은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퍼블릭 디플로머시는 어떠한가?—외무성이 공보문화에 관여하는 시대는 끝났는가?’이다.⁵¹ 이처럼 일본은 공공외교에 있어 공보를 중시하고 있는데 2012년 외무성 조직개편을 통해 공보문화교류부에 보도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공보 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세계 여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일본의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익 실현을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 NGO와의 협력 강조

일본은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NGO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1996년의 ODA대강은 2003년, 2010년 개정을 거듭할 때마다 ODA 실시에 있어서 NGO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NGO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외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NGO와의 협력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구호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은 공공외교 정책의

⁵¹ 渡辺靖, 『文化と外交』(東京: 中央公論, 2011), p. 89.

수립과 집행에 NGO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NGO와의 협력 체제를 정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일본 공공외교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전전 군국주의 국가 이미지의 탈각과 평화국가, 문화국가의 이미지 구축
일본의 공공외교의 성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전전 군국주의 국가 이미지의 탈각과 평화국가 이미지의 구축이다. 전후 평화헌법과 요시다노선을 기축으로 비군사적 자원을 동원하며 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경제 위기 극복,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국제적 공헌을 해온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1951년 유네스코 가입을 시작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파급하는데 힘을 기울였는데, 1960년대 해외공관에 공보문화원을 연이어 개설하며 일본어 보급과 일본문화 소개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일본 문화의 국제화를 위해 문화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일본의 J-POP,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진흥하고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클래팬이 주목받기에 이르렀다.⁵² 미국의 국제교육협회나 일본 외무성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일본의 공공외교가 주효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미국국제교육협회의 조사 결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일본에 유학한 미국인 학생 수는 13%나 증가하였다. 2010년 외무성이 미국에서 실시한 대일인식조사 결과, “풍요로운 전통과 문화를 지닌 나라”(97%), “애니메이션, 패션, 요리 등 새로운 문화를 발신하는 나라”(82%) 등 긍정적인 대일 이미지가 미국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⁵² 위의 책, pp. 162~174.

• 공공외교와 안보, 경제적 이익의 연계

일본의 공공외교는 군사력의 제한 속에서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통상국가로서의 국가이익과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ODA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왔다. 일본의 ODA는 국제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추진 목적과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ODA를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시각에서 하고 있다. 일본의 ODA는 1960~1980년대 원조체제의 확립 및 구속성(Tied) 원조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출 촉진을 위한 배상 전략과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의 ODA는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엔고에 따른 일본 기업의 동남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ODA와 FDI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ODA가 수원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FDI를 유인하는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유발한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다.⁵⁴ 1990~2000년대는 비구속성(Untied) 원조의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환경 보전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는 원조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였고,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환경 보존, 빈곤 대책, 민주화 촉진, 시장경제 노력 등 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9.11 테러 이후 일본은 국제 평화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경제적인 분야뿐 아니라 군사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ODA에 의미를 부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회생을 위한 기회로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한다는 점은 수출 촉진, 경제 안전 보장 등 외교 수단으로써 ODA가 활용되어 온 일본

⁵³ 위의 책, p. 88.

⁵⁴ 木村秀美·戸堂康之, “開発援助は直接投資の先兵か? 重力モデルによる推計,”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7-J-003), 2007.

ODA 특징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쿨재팬 전략 또한 ‘문화 산업의 해외 전개’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커다란 경제효과의 획득을 지향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에 의해 패션, 문화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현재 2.3조 엔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향후 18개국으로 시장을 확대해 2020년까지 8~11조 엔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한계

• 종합적인 전략과 공공외교 사령탑의 부재

공식적으로 일본의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외무성의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이지만, 경제산업성의 제조산업국 쿨재팬실, 해외공관의 공보문화원, 독립행정법인인 국제교류기금, 국제협력기구, 일본 정부관광기구 등이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외무성의 일개 조직에 불과한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를 조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공공외교를 펼침에 있어서 공보문화외교라는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보문화외교의 관점에서 전형적인 공공외교의 방식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공보문화외교의 바람직한 제도화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의 제1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누구에 대하여(대상),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가(내용)를 명확하게 하며, 그것을 위해 취할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반면, 공보문화활동에는 명확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양호한 외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형성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이다. 전자가 ‘Public Diplomacy’의 개념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오히려 전통적인 공보외교의 중요성을

I

II

III

IV

강조한 것이 된다. 가타오카 테이지(片岡貞治)가 “일본의 퍼블릭 디플로머시는 공보문화 등의 발신에 역점이 두어져 있어서 미국과 같이 ‘외교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서포트’라고 하는 전략적 발상이 별로 없다”⁵⁵고 지적하는 것이 이 점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보통국가노선과 국가브랜드 전략의 부재

일본은 요시다노선을 포기하고 통상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본이 추구하는 보통국가노선은 위안부 문제와 센카쿠제도 문제의 사례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립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오기 쉽다. 이제 평화국가, 문화국가라는 일본의 국가브랜드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면, 보통국가노선 하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공공외교의 목표는 무엇이며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브랜드는 무엇인지, 전체 외교 노선·외교정책과의 보다 통합적인 시점에서 공공외교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현대문화를 중심으로 아무리 공보를 강화해도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의 공공외교는 어려움을 겪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무효화시킬 우려가 있다.

• 취약한 쌍방향성

공공외교에서는 자국의 좋은 점만을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외교에서는 자국민과 타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쌍방향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⁵⁵ 片岡貞治, “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外交の方向性(日米同盟等),” 『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外交の方向性』, 早稲田大学国際戦略研究所 (早稲田大学, 2002), p. 22.

•NHK 국제 방송의 문제점

TV의 국제 방송은 국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일본은 이 방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뒤쳐져 있다. 현재의 NHK 국제방송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외국인을 위해 특화되어 있지 않다. 방송 내용도 일본 국내 방송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 결과 NHK의 국제방송은 12개국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며, CNN의 113개국, BBC의 111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아리랑TV가 68개국에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일본의 NHK의 국제 방송이 공공외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음은 분명하다.⁵⁶

⁵⁶ 星山隆, 『21世紀日本外交の課題』, pp. 268~269.



III

일본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입장과 정책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일본의 입장과 정책은 결코 고정된 것이 될 수 없다. 이는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일본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가 일본의 입장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개요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및 안정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이래의 전통적인 주권선, 이익선의 인식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세기와 현재의 이익선을 둘러싼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는 19세기에는 일본이 급격한 국력 상승에 기초하여 대외팽창을 위한 하나의 논리로 이익선의 개념을 사용하였음에 비해, 현재는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희망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익선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이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 상황대응적, 기회주의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반적으로 쇠약일로에 있는 일본의 국력 쇠퇴 현상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의

⁵⁷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검증되었다. 일본인들이 보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① 북핵문제 우선 해결, ②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 ③ 한반도 현상 유지, ④ 한국 주도의 통일정책 지지 순이었다.

일본은 국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며, 따라서 현재의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문제,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대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매우 중요시하며 ① 한반도에서의 분쟁 등 위기상황 발생 회피,⁵⁸ ② 외부세력의 한반도 지배 회피, ③ 우호적인 세력에 의한 한국 통치 등을 희망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국교 수교 이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진행되어 왔다.⁵⁹ 따라서 일북관계는 한일관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⁰ 더구나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의 대북 제재는 그 정도가 더욱 강화되어 최근 일북관계는 거의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⁶¹

(2) 혼재된 통일관

일본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입장은 확정된 하나의 입장이 아니고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남북의 합의통일을 이상적인 통일 형태로 간주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수용하고

⁵⁸ 한반도에서의 분쟁 및 전쟁 발생은 일본에게 직접적 그리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하여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일본열도의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국가안보에 무관치 않으므로 일본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⁵⁹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지지, ② 주된 당사자인 한국의 의지를 존중, ③ 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촉진, ④ 대북관계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히라이와순지,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협력,”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엮음, 『한일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파주: 한울, 2012), pp. 123~125.

⁶⁰ 일본 정부는 일북관계 진전을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즉 한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⁶¹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과는 별도로 일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에하라 전 외무장관에 의하면 일본은 납치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서 북한과 별도의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납치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본의 독자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있다.⁶² 이는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일부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도 엄연한 현실이다.

먼저 통일에 대한 일본 내의 긍정적인 시각을 정리하면, 첫째, 남북한 대치의 종결은 결국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즉 북한이라는 실제적인 안보적 위협의 사라짐은 일본의 국가적 안위에 커다란 이득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한국의 출현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보다는 덜 위협적인 새로운 인접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결국 지리적인 인접국인 일본의 경제력에 상당히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통일한국은 일본에게 이전보다 더 확장된 시장을 제공해 줄 것이며, 또한 통일한국은 통일의 후유증으로 상당한 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될 것인데, 이때 일본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의 본격적인 경쟁국이 될 거라는 일부의 평가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견해로 무토 주한 일본대사의 통일관련 발언을 상기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강력한 이웃국가 출현을 반대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현실 및 일본의 대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은 일본에게 3가지 큰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며, 둘째, 일본에게는 큰 시장을 제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⁶² 일본의 학계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해 무관심하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시장민주주의라는 체제 규범에 따른 한국 주도의 통일 추세를 추인하고 있다. 기미야 다다시,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통일과평화』, 제3집 1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pp. 10~13.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통일한국은 세계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며, 통일한국은 일본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이렇게 국익과 이해관계를 매우 유사하게 하는 통일한국을 이웃국가로 갖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합치한다는 것이다.⁶³

반면에 다양한 이유로 통일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로,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로 기능할 것이라는 견해다. 즉, 통일에 따른 남북 병력 및 무력체계의 통합은 새로운 강력한 군사강국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WMD를 통일한국이 관장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일본식의 인식이 강하다. 둘째로, 통일한국이 갖게 될 경제력은 일본경제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부상·대두를 의미한다는 시각이다. 한국 측의 기술·자금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이 결합 시 통일한국은 일본의 유력한 수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긴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다. 통일한국은 대일관계를 경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동북아에서 일본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⁶⁴

이를 정리하면 일본은 한반도 통일은 지지하고 있지만, 통일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당분간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속내는 한반도 비핵화·현상 유지가 가장 현실적·효과적인 한반도 정세의 희망사항인 것이다.⁶⁵

⁶³ 일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들은 동북아 질서 안정, 동북아 경제 발전, 통일한국의 균형 외교 등으로 통일의 순기능적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⁶⁴ 이는 통일한국 대두 시 일본인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국민의식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에 일본인은 27%가 긍정적이던데 비해, 59%가 불안해질 것으로 대답하였다. 『한국일보』, 2011년 11월 11일.

⁶⁵ 사실 일본을 포함한 주변4강은 모두 한반도 통일을 소극적으로 찬성하고 대체적으로 현상 유지(분단)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대적인 우월의

일본 내 존재된 통일관과 관련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최소한 학계(Ivory Tower)와 정책결정과정 참여자(Policy Maker) 간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계는 진보적이며,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통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득(Positive Sum Game)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 반면에, 정책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며, 통일에 대해서도 기회주의적이고, 통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주된 관심을 두는(Zero-Sum에 유사한 Game)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학계의 견해(공개자료)를 일본 전체의 인식으로 발전·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오히려 수적으로는 소수인 정책관련자들의 인식 및 판단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며, 그들의 속내를 추적·파악하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⁶⁶

(3) 일본의 통일관 변화 가능성

최근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의 변화는 기존의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에 일부 변화를 줄 것인지 주목된다. 즉 전반적인 일본의 국력 저하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 가능성이다.

이전에 일본 정부는 압도적인 국력 우위를 기초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접근하였고,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신감에 기초해서 통일에 따른 한반도 질서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적극적인 역할 가능성을 모색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총체적인 국력 쇠퇴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통일관을 갖게 만들 가능성을 안고 있다.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 위상 추락과 국내정치·경제상황의 저조 등에 따른 일본의

파워를 갖고 개입 및 관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현상 유지를 위해 유화·국제협조·시위 등의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⁶⁶ 일본의 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면우, 『현대 일본외교의 변용과 한일 협력』 (파주: 한울, 2011), pp. 472~485. 참조.

자신감 결여다.

그 핵심에는 중국, 한국의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폭적인 국력 증대에 따라 중국은 지역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중국 접근 및 경사가 가시적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 후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거의 명확해 보인다. 자연히 일본은 통일 한국이 중국의 강력한 영향 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⁶⁷

한국의 성장, 경쟁자로서의 부상도 일본에게는 전략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경제의 대일 역전 가능성까지도 보고되고 있어 일본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일본은 통일한국의 국력 증대에 대해 일본이 전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역으로 통일 달성 후 다양한 후유증으로 통일한국의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기대하는 소수의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세력은 약체 통일한국의 출현이 일본의 국익과 합치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제는 일본이 선두에서 주도하는 기러기 비행형의 아시아경제발전 모형은 유효하지 않다. 즉 일본이 가장 앞에서 날아가고 일본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신흥국들이 차례로 경제성장을 하는 일본 주도의 경제 패턴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배제된 미국 중심의 아태 지역권 국가들과의 경제 연대인 환태평양경제연대(TPP)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력 쇠퇴를 감안하여 향후 일본의 대응과 관련해 주목을

⁶⁷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평화 프론티어소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면서 통일에 부정적인 자세를 노정하였다. 또한 일본이 온사마에 빠져 한국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통일한국이 반일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일본의 중요한 과제이며, 남북이 통일되면 일본보다 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역사적인 힘의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TV 조선 기사, “일본, 남북한통일되면 안되는데...” (2012.7.9.)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9/2012070902280.html> (검색일: 2012.10.1).

끌고 있는 것이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프런티어분과회 평화 프런티어부회의 보고서이다.⁶⁸ 동 부회는 2025년까지 일본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일본에게 점점 더 불리해져 결국 일본의 존재감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평화창조국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적절한 방위력을 구축,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⁶⁹ 또한 이를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으로 ① 자력대처능력 강조, ② 미국의 지역공약 유지 지원, ③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한 지역국가들과의 안보협력 확대 및 심화, ④ 중국의 평화적 부상 환경과 동시에 무력행사 및 위협 근절, ⑤ 일본은 가치 있는 협력의 상대임을 인식시킴 등을 거론하고 있다.⁷⁰

〈표 III-1〉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가?

(단위 %)

국가	년도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치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치 않는다	③+④
미국	2010	9.5	32.9	42.4	47.2	10.4	57.6
	2011	6.5	31.6	38.1	49.5	12.4	61.9
일본	2010	1.5	17.3	18.8	64.1	17.2	81.2
	2011	1.2	12.2	13.4	63.9	22.7	86.6
중국	2010	1.3	13.6	14.9	68.0	17.1	85.1
	2011	0.8	9.4	10.2	65.0	24.7	89.7
러시아	2010	1.3	17.3	18.6	68.9	12.5	81.4
	2011	1.2	14.6	15.8	69.9	14.3	84.2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⁶⁸ 平和のフロンティア部會, 『平和のフロンティア報告書: 平和の包括的な創り手として』, <<http://www.npu.go.jp/policy/policy09/pdf/20120706/hokoku5.pdf>> (검색일: 2012.10.3).

⁶⁹ 이 위원회는 도쿄대와 게이오대, 와세다대의 외교안보 관련 교수들과 내각 관료 등 14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⁷⁰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일본연구팀, “일본은 소위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週刊國防論壇』, 제1427호 (국방연구원, 2012.9.10), pp. 4~6.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정책

일본은 한반도 통일의 여건과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인식과 판단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일본의 한반도 통일정책을 논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앞서 논의한 것처럼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이나 공식 문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문서들은 희소하고 자료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학자들의 연구 등에 기초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 일본이 보는 통일과정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① 경제 문제로 인한 북한의 붕괴, ② 북한의 남침, ③ 평화적 해결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 시(붕괴, 전쟁) 일본에의 영향을 우려해 항시 북한 및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로 주일 미군 기지나 오키나와 등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붕괴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주로 대량 난민, 한국의 재건 자금 지원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희망하는 시나리오인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력 수반치 않는 대화에 의한 통일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 일본 정부는 미국·중국 등 관련 주요국과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 방향

일본 정부는 급격한 한반도 통일을 선호하지 않는다. 급격한 통일은 지리적으로 최인접한 자국에게 예기치 않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케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과 같은 국력 쇠퇴기에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그러한 과정에 독자적이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⁷¹

일본의 독자적인 한반도 통일관련 대응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자국의 정책적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의 입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은 불투명, 불명료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가 그만큼 예측불허의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복합적인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최근과 같은 유동적인 정세 변화기에 총체적이고 효과적인 통일 대응 정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에서의 정세 변화이고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다루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특수한 감정과 자세를 갖는다. 즉, 통일로 인해 강력한 한국이 출현하면 일본에게 정치·외교·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양측 간의 국력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분단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유지될 것이고 일본은 안보적으로 불량국가(Rogue State) 북한의 안보위협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외교가의 컨센서스적 결론은 통일의 촉진이 아니고 가능한 현상 유지(분단)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억지력 정책을 후방에서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봉쇄하며, 나아가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⁷¹ 평화프론티어 부회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규칙 제정(Rule-Making)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강화하는 것이다. 즉 일본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폭력을 수반하는 신속한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도 한국인들은 일본 측의 의도를 심히 의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일본이 통일한국의 경제력 약화를 위해 통일을 지지한다든지,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열의 부족은 한국의 정치·군사적 능력 획득 저지를 위해서라는 발상이 존재한다고도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최선책은 소극적·저자세적·겸손한 대응이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한반도 외교에서의 특성, 즉 실용주의·기회주의적 적응과 반응적(Adaptive and Reactive) 대응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⁷²

(나) 미일 협력 대응

미일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① 한반도 유사사태(Contingency) 대비, ② 한반도 비핵화(북한 핵능력 동결), ③ 남북대화 촉진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통일관련 정책을 충분히 조율(Policy Coordination)할 수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에 직접 다수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세계전략 하에 한반도 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와 무관치 않은 일본의 후방 지원 및 지지를 활용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헌법 하의 군사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안보 주도를 적극 지지하고, 때로는 미국의 안보적 공약 준수를 촉구하면서까지 유사 대비 역량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통일 후 옵션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양국은 자국에 우호적인 통일한국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⁷²Nicholas Eberstadt, "Hastening Korean Unification,"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Vol. 76, No. 2, p. 79.

통일한국의 경제적인 활기, 정치적인 개방, 미군 지속 주둔을 공통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통일한국의 대중 경사, 민족주의 재부상, 반일감정의 고조 등을 회피하려 한다. 무엇보다도 WMD 능력을 보유하는 통일한국의 출현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역의 군사적인 경쟁 확대, 역사적인 반목 및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이유로 극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 간의 역사 불신의 유산, 남북한의 일본 의도 불신여지 등으로 인한 일본의 정책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의 양면 가치적(Deeply Ambivalent)인 접근, 즉 통일을 방해하거나 저지(Block)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촉진(Hasten)하지도 않는 방식을 인지하며, 나아가 강력한 통일한국의 출현에 대한 일본 측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장래와 관련해 미국은 남북한·중국 등과 직접 나름대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비해, 일본은 현재 중단된 6자회담의 참여를 통한 관련국들과의 대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 대화 수준의 비대칭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일본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다) 대한관계 강화

최근 미일의 상대적인 국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 등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한관계 추진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때 일본의 한반도 외교를 주도하였던 다나카 히토시는 “한반도는 일본 외교의 원점”이라고까지 갈파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과 견고한 선린우호 국가관계를 유지할 때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유리한 외교 및 안보 환경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은 첫째,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강력히 희망할 것이다. 즉 일본은

I

II

III

IV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만약 핵보유시 일본의 안보전략 대전환의 불가피함을 호소할 것이다.

둘째, 통일에 따른 일본의 고립화 가능성을 철저히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국민 정서 및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통일한국이 중국에 경도되거나 한중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대중 균형을 위해 통일한국과의 밀접한 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일 간의 대중 연대 가능성의 모색(Hedge against China, Balancing against China)이 추진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안보인식에 있어서 최대의 안보 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인식이 고착될 경우 이는 더욱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중관계의 발전을 내심 우려하고는 있으나,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듯하다. 장시간에 걸친 한일 간의 다양한 제도적 관계 구축, 지리·경제적인 특수함, 시민 세력 간의 유대관계 등으로 한중관계에 비해서는 월등히 안정적인 양자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한중 경제 분야 상호 보완성은 지속적으로 그 잠재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도 보통 예측보다 그리 낙관적이지는 못하며, 오히려 한중 경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로 ① 자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이해당사국이며, 따라서 중요한 회담(예를 들면 2+4)에 참석해야 됨을 호소할 것이며, ②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대량난민 문제와 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고 요구할 수 있다.

2.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필요성

(1) 한국인의 대일본 인식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에 기초한 뿌리 깊은 일본에 대한 불신감과 경계감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일본과 관련된 불행한 역사는 왜구의 조선 침략, 임진왜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왕조의 멸망 등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지 통치기에 누적된 반일감정의 존재는 한국인들의 일본 인식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조선독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의 무자비한 단속·저지, 핵심 독립운동 인사들의 처형, 일본의 관동지방 대지진 발생 시 조선인의 대량 학살, 창씨개명, 신사참배, 민족혼 말살 정책 추진 등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더구나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자원 및 수많은 인명을 강탈하는 잔인함을 발휘하였다. 전후 패전국 일본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진정한 자세를 보여주지 않아 한국 측의 불신을 대폭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인사들의 거의 매년 반복되는 망언 속출은 일본에 대한 평가를 낮추었으며, 결과적으로 커다란 실망으로 연결되었다. 일본에 대한 기대는 독일의 과거 반성과 대조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 및 신뢰를 극도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일본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왜곡의 문제, 독도 문제 및 종군위안부 문제의 이슈화에 따라, 한국인들의 일본 인식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I

II

III

IV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과거 역사 문제 인식의 문제점은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언동과 반복되는 정치 지도권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은 매번 한국인을 크게 분노하게 하며, 최근 일본의 일부 층에서 이전의 무라야마 담화(1995년), 고노 담화(1998년)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되면서, 한국인들의 일본 측의 사죄 부족에 대한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 매스컴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인 참가자들은 사죄가 불충분(97%), 과거문제는 미해결 상태(94%)의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아사히신문 2010.6.10)⁷³

한국인들의 과거문제로 인한 일본 불신을 구조적으로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① 일본의 국제안보 부문에서의 역할 강화 및 확대, ②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 우경화 현상의 증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일본은 냉전 종료 후 일시적으로 독자적인 안보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였지만, 1997년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미국을 후방지원 한다는 명분 하에 한반도 및 지역 안보 문제에서의 개입이 확대 및 제도화되었다. 9·11 테러 이후 확대되고 있는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자위대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의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일본 군사력의 현대화 노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도 기본적으로는 경계적,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한국인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기억하면서 일본의 첨단적 군사력이 일본 외교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최근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우경화 현상의 진행은 일반 한국 시민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기저부터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야당 자민당의 총재로 부활한 아베와 민주당 정권 일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여·야당을 초월한 일본 정치권의 역사인식을

⁷³ 고히리 스스무, “한일관계와 공공외교,”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역음, 『한일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파주: 한울, 2012), pp. 180~183.

그대로 노정하고 있어 한국 측의 실망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탈냉전기 도래 이후 일본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헌법개정과 집단자위권 보유 논의 등 기존의 일본 국내 체제 변경 노력들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⁷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인들은 일본의 장점 및 강점을 동시에 인정하는 다소 이중적인 대일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본은 한때 한국 경제발전 모델로 기능하였고, 일본의 선진 과학 기술은 일차적인 배움의 대상이었다. 일본인들의 예의·근면성·질서인식 수준 등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국력 상승으로 기존의 긍정적인 일본관에 다소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양국 시민 간의 교류 증대로 인해 상호인식 정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존경, 경멸, 증오 등의 복합 심리는 때로는 일본에 대한 자신감, 또는 대조적으로 자기비하의 양 극단으로 노정되기도 하였다.⁷⁵ 그러나 최근 일본의 상대적인 국력 쇠퇴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의 대일 인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즉 자신감과 도덕적인 우월감에 기초해 일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일본의 강점, 장점들을 대폭 희석시키고 있다.⁷⁶

한국의 상대적 성장에 따른 양국의 국제정치 위상의 상대적 대등화는

⁷⁴ 그러나 이러한 일본 국내정치와 관련된 사항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고, 한국인들의 일차적인 일본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문제와 역사인식의 문제이다. 즉 이러한 일차적인 요소들의 반성 및 수정 없이는 한국인들의 대일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⁷⁵ 김영명, 『일본의 빈곤』 (용인: 미래사, 1994), pp. 266~267.

⁷⁶ 최근 한·중·일 3국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일본 신뢰(21%), 일본의 한국 신뢰(50%)/ 한일관계 좋다; 일본(53%), 한국(32%)/ 한일관계 나쁘다; 한국(64%), 일본(27%) 등으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표출된 반면, 한국인들의 일본관은 여전히 불만과 불신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한국일보』, 2011년 11월 11일.

한일관계 발전에 순기능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⁷⁷ 즉 지구적 차원, 아태 또는 동아시아적 차원의 역할 동질성이 증대되어 상호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여 지정학적 조건의 유사성도 존재하며, 대중 관계 조정이 양국의 전략적인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어 안보관계 구축이 가능해졌다.⁷⁸

〈표 Ⅲ-2〉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단위 %)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2007	53.4	11.6	10.2	0.9	24.0
2008	60.7	9.5	7.8	1.7	20.4
2009	68.3	8.7	6.1	1.0	15.9
2010	70.6	9.6	4.2	0.8	14.9
2011	68.8	9.1	5.3	0.8	16.0
평균	64.4	9.7	6.7	1.0	18.2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p.114.

〈표 Ⅲ-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국가

(단위 %)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2007	21.1	25.9	15.6	1.3	36.1
2008	16.0	34.5	14.6	1.2	33.7
2009	12.5	17.7	15.9	1.1	52.9
2010	8.3	10.4	24.6	1.2	55.6
2011	8.6	11.6	33.6	0.3	46.0
평균	13.3	20.0	20.8	1.0	44.8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p. 118.

⁷⁷ 나카니시 히로시, “세계정치의 구조변화와 한일협력의 의의,”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엮음, 『한일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파주: 한울, 2012), pp. 24~30.

⁷⁸ 다나카 아키히코, “중국의 대두와 한일 협력,”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엮음, 『한일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파주: 한울, 2012), pp. 60~67.

(2) 한국인의 통일관련 대일본 인식

한국인들은 주변4강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미국이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미국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 역사를 통해 아직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그러한 주변국들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감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⁹

한국인들은 일본이 중국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한반도 통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들은 통일에 부정적인 일본 내의 의견에 착안해 일본이 통일에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국가화는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통일의 결과일 것으로 본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본은 그것을 하나의 가정사항으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논리는 곧 일본의 핵무장 불가피론으로 종종 나타나고 있다. 둘째,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통일한국의 잠재적인 경제력 및 기술력 증대에 대한 일본의 우려이다. 일본에게 통일은 새로운 강력한 경쟁국가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⁸⁰ 셋째, 한국인들은 일본이 통일한국에서의 민족주의 대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본다. 통일에 의해 민족주의는 꽃을 피울

⁷⁹ 통일에 긍정적인 국가 순위는 미국 → 러시아 → 일본 → 중국 순이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pp. 361~364.

⁸⁰ 일본 국력의 쇠퇴 경향이 강해질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강화될 소지가 높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총리 자문기구의 한반도 통일관련 발언을 보더라도 그들의 자세 변화의 가능성, 나아가 일종의 초조 현상까지 엿볼 수 있다.

것이고, 그것은 바로 강력한 반일감정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일본의 우려이다. 또한 통일의 후유증은 일시적으로 불가피할 것인데, 이를 수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한국은 전통적인 반일감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일본은 통일한국이 기존의 안보체계 내에 머물기를 희망할 것으로 본다. 즉 일본은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통일한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경도되지 않기를 기대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의해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저지하고 싶은 것이 일본의 전략적인 희망사항이 될 것이다.

통일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본인들은 대체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그것이 자국의 국익과 관련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한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다.⁸¹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관심이 특별히 높지 않다고 본다. 특히 최근 일본인들의 내부 지향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는 일본인들에게 흥미로운 것이 아니며, 생각하기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식인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며, 일본이 그를 위해 당장 나서서 할 일도 별로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⁸² 따라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인들의 주 관심은 주로 납치문제, 미사일문제, 핵개발과 6자회담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통일과정에서의 일본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압도적일 것이며, 일본은 미국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⁸¹ 본 연구가 일본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통일 달성의 시기를 '20년 이상'과 '15~20년 내'가 압도적으로 많음이 확인된 바 있다.

⁸² 이노구치 다카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통일연구원,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61~71.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젊은층의 인식 및 대응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K-Pop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문화는 일본 젊은층의 대한 인식을 크게 변질시켜 우호적, 호의적인 한국관을 배양하고 있으며, 함께 갈 수 있는 한일관계 구축에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젊은층의 실상은 의외로 한국의 현실에 무지하여, 분단 사실조차 모르며, 한국과 북한을 구별하는 의식 또한 크지 못한 실정이다.⁸³ 따라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 특히 젊은층이 한반도 분단 현실을 정확히 알게 하는 기초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한반도관 및 국제정세관이 젊은층에게 계승 및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일본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패전국 의식이 희박해 정상적이고 독자적인 일본의 국가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대체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과 군대의 보유, 활용 등에 동의한다. 즉 자위대를 국군화하며, 일정한 군사력의 보유와 유지에 일본의 국가위상 확립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젊은 세대의 국가관이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일본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 통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국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⁸⁴ 한국인들은 일본 차세대 젊은이들의 국가관과 세계관이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당연히 그 영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⁵

⁸³ 리치메이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들과의 면담 시 주요 발언 중 (2012.7.17).

⁸⁴ 폴 케네디 교수는 중국 차세대 젊은이들의 오만함이 중국의 대외정책의 강경함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중앙일보』, 2012년 10월 2일.

(3) 한국인의 한일 안보협력 인식

한국인의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호적인 세력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동일 가치를 추구하는 최인접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에 반해, 반대세력은 주로 일본의 군사강국화와 중국 요소 고려 등의 연유로 안보협력의 부정적인 파장을 강조하고 있다.⁸⁶

(가) 추진세력의 인식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협력 추진파는 안보 현실을 중시해 불확실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안보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우선 호전적인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안보 교류 및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북한 관련 인식 및 대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의 수준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서 나타나듯 한시라도 저장도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협인식이 유사한 일본과도 협력의 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으로 미국과 특수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 유사를 상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 등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 무관한 국

⁸⁵ 일부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새로운 정치리더십이 과거문제와 역사 문제에서 과거의 틀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면서 특히 한반도 문제, 그 중에서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그 어느 관련국보다도 솔선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⁸⁶ 그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에 불발로 끝난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의 체결 문제였다. 이 사건은 한국 내에서의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론의 분열을 극명하게 노출시켰다.

가도 아니다.⁸⁷ 미국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참여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⁸⁸ 또한 일본의 전반적인 정보능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데, 양국의 정보 자산을 상호 활용할 경우 북한정세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대북 정보 역량 중 정찰위성, 이지스함, 전통적으로 강한 신호정보 능력 등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추진세력들이 북한 이외에 안보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는 아마도 중국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공개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거명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완곡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북한처럼 명확한 적대세력은 아니지만, 중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일 간에 정책적 협조의 여지가 충분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은 지역의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 지역질서와 지구적 차원에서 광의의 안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⁸⁹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전략 대화를 바탕으로 협력의 수준을 점차 강화하고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국민의 상호 불신과 경쟁의식으로 안보 협력의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국의 지식인 집단이 소통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⁹⁰

⁸⁷ 이상우,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新亞細亞』 2011년 가을호 (신아시아연구소, 2011), pp. 18~20.

⁸⁸ 김성한,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공조의 방향,” 『新亞細亞』 2011년 겨울호, (신아시아연구소, 2011), pp. 40~41.

⁸⁹ 해상사고, 탐색구조, PKO 활동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최근 중시되고 있는 인간안보 등의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인식이다.

⁹⁰ 이상우,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p. 20.

(나) 신중세력의 인식

한일안보협력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세력들은 우선, 그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이 자진해서 일본의 재군비 및 안보적 역할 확대에 따른 자위대 활동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를 초래한다는 것은 매우 우매한 판단 및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 군국주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최근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우경화 및 보통국가화 경향을 견제 혹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최소한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표현할 때까지 이같이 민감한 양국 간의 협력 이슈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 정부에 충고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사 문제와 안보 협력은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파는 일본 측이 최근 독도 문제와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은 대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에 신중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즉 그들은 중국의 총체적인 가치(무역 등 경제관계, 한반도 안보 및 통일과의 관련성, 북중관계 등)에 착안하면서 대중 견제를 위한 한일협력에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향후 대중 관계의 가능성이 한일 안보협력이라는 협의의 사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한일 안보협력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인 사고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한일 안보협력으로 인해 자칫 한·미·일 대 중·러·북 간의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다) 향후 한일안보협력 전망

한일안보협력을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인 일본의 입장과 협력의 배경을 제공하는 최근의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은 한국과 일정 수준의 안보 교류 및 협력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다.⁹¹ 즉 일본도 한국 측의 과거사 반성 및 정리 요구를 숙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헌법9조의 제약이 구조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⁹²

또한 일본은 북한체제의 단기적 붕괴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일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일본 정부에 의한 강경한 대북 제재 정책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해 북한의 신체제에 접근하면서 대화의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⁹³ 일본의 대북용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그리 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일본의 안보 관련 여론은 상당히 분열되어 있어 국내적으로 합의(consensus)를 형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⁹⁴

⁹¹ 1990년대 중후반 의사동맹의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모색되었고, 그 후 다시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재모색되었으나 역사, 영토문제의 부상으로 급냉의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阪田恭代, “擬似同盟としての日韓安全保障協力,” (2012년도 일본국제정치학회 발표 논문).

⁹² 어떠한 측면에서는 대중 및 대북 견제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의 입장이 논해지기도 한다. 일부의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도 구태어 한일 안보협력을 눈에 보이게끔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미치시타 교수, 2012년도 일본국제정치학회 일한안보장협력 세션 토론).

⁹³ 최근 일북관계의 정체에 따라 일본의 대북 발언권·영향력은 저하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게도 기회는 올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은 한국·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한 중국 조차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道下徳成, “戰略的な對北朝鮮政策を考える,” 『外交』, Vol. 3 (2010), pp. 92~97.

다음으로 한일 안보협력은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 힘의 상관관계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들의 한일 안보협력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중국의 국력 증대와 그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 북한의 정세 변화, 중일의 국력 변화와 그에 따른 중일관계의 변화 등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향후 중국의 요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존재감 증대는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배경이 되지만 동시에 일정한 제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인들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일본과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에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일 안보 협력은 주로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분야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⁹⁵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북 군사적 대처를 중심으로 하는 한일 안보협력이 당연히 국민정서에 적합해야 하며, 국회를 비롯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여 지지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협력을 비판하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의 중국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 내 반일 정서를 설득하는 것에 따라서 향후 한일 안보협력의 속도와 수준이 결정되겠지만, 그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⁹⁴ 현 방위성 대신인 모리모토는 일본의 여론은, 비무장 중립론(좌파, 3-4할), 자주국방론(우파, 1-2할), 미일동맹 중시론(중간파, 4-5할) 등으로 나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소 우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森本 敏, 『日本の瀬戸際』(實業之日本社, 2011), pp. 108~110.

⁹⁵ 南昌熙 外, “北東アジアにおける同盟變革と日韓 安保協力,” 『國際安全保障』, 제40권 2호 (2012), pp. 116~117.

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1) 목표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를 식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전문가 조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은 급격한 한반도의 통일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부터 공공외교의 목표를 도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일관계의 특수성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식민통치를 행한 당사국이며, 한국 혹은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발신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통일이라는 미묘한 문제를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분명히 한일 사이에는 국교가 있는 반면, 북한과는 국교가 없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하여 ‘이념과 체제를 같이 하는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항상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일본이 북한에 의해 주도되는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고 한국을 지지하는 형태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펼친다는 것이 대북한 외교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그와 같은 형태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I

II

III

IV

이상과 같은 점은 이번 연구에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일본이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대답이 32.12%인데 반해,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57.1%로서 과반수를 넘겼으며, ‘일본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도 그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낮다(25%),’ ‘낮다(50%)’라고 대답함으로써 응답자의 75%가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거의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의미있는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의 공공외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와 그에 입각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이 분명히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제약하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다.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라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기본 입장에는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할 의도는 없지만, 그 과정은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북한에 전파하는 공공외교가 행해지고 있다고 본다.

둘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입장을 한국 국민, 북한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일본의 주장에 동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일국교 정상화 교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의 하나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도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통일 이전에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현재 활발한 공공외교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을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2) 조직, 수단 및 예산

상기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공공외교는 전형적으로 주로 한반도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상, 외무대신, 관방장관 등의 담화 등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조직으로는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있다. 원래 이 납치문제대책본부는 2006년 납치문제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수상에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만든 것인데, 2009년 10월 13일 정권교체를 달성한 하토야마내각이 기존의 조직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치한 것이 현재의 납치문제대책본부이다. 기존의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전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등 상징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롭게 발족한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좀 더 실무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조직 측면에서 볼 때, 대신급으로는 부분부장 자격으로 납치문제담당대신·내각관방장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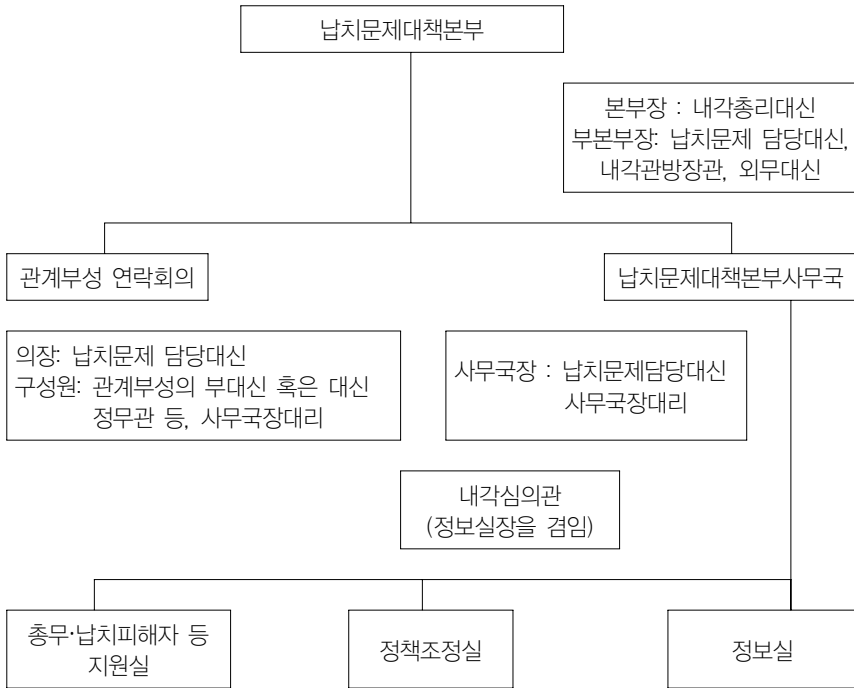
II

III

IV

외무대신만이 구성원으로 있으며,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과 인원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이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일본국 정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⁹⁶’라는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활발한 공공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조직체제는 다음과 같다.

〈표 III-4〉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조직도



이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사가 2012년 1월 31일자 산케이신문에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약 12억 엔이며, 이 12억 엔 중 9억 엔이 ‘정보수집 및 분석 그 외의 조사’에 사용된다. 그 외에 북한을 향한 라디오 방송의

⁹⁶ 日本国政府: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 <<http://rachi.go.jp>>.

실시비용으로 5천만 엔, 팸플릿제작 등 납치문제 계몽비로 8,400만 엔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⁹⁷

한편 대표적인 민간조직에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가 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이하 ‘구출하는 회’)는 1997년 3월 결성된 ‘가족회’(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가족 연락회)를 지원하는 전국의 조직들이 연합하여 1998년 4월에 결성된 것으로,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 방문에 의해 북한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조직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활동이 활발해져서, 공식 홈페이지⁹⁸의 기술에 의하면 2011년 9월 현재 전국의 38개 도도부현과 하나의 시에 39개소의 ‘구출하는 회’가 있으며, 그 외에도 청년조직 하나와 40개의 가맹조직이 있다. 이 ‘구출하는 회’의 홈페이지에는 이하와 같은 2011년도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이 조직의 활동 윤곽을 알 수 있다.

〈표 III-5〉 2011년도 ‘구출하는 회’ 전국협의회 결산보고

(단위 엔)

항목	금액	비고
수 입		
지원금	14,178,278	모금에 의한 수입
배지 지원금	6,052,330	배지판매에 의한 수입
참가비 수입	911,000	연속집회, 특별집회, 국제세미나 등
접수입	107,633	자료배포수입, 이자 등
집회분담금 수입	3,735,000	국민대집회, 국제세미나, 긴급집회 등
A: 당기 수입 합계	24,984,236	

⁹⁷ 『産経新聞』, 2012년 1월 31일.

⁹⁸ 救う会: 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国協議会, <<http://www.sukuukai.jp/>>.

전기로부터의 이월수입	12,612,226	
B: 수입 합계	37,596,462	
지출		
국민운동비	4,907,656	집회·회의비, 간사회경비, 회견비 등
국제활동비	3,489,119	외국파견·초빙, 통역·번역비, 정보수집비
통신발송비	4,229,662	안내장발송
여비, 교통비	2,462,692	간사·임원 여비, 강사파견, 택시비 등
인쇄비	822,700	팜플렛, 봉투, 자료, 현수막 등 인쇄
소모품비	273,811	소모품
수수료	288,915	계좌이체 수수료 등
사무실 비용	11,607,601	급여, 월세비용, 수도·난방·전기세 등
잡지출	203,500	경조사비 등
C: 당기 지출 합계	28,285,656	
A-C: 당기 수지 차액	-3,301,420	
B-C: 차기 이월 금액	9,310,806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라고 할 수 있지만, 수상관저와 외무성의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독도 문제가 상시적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방위성이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2005년 이래로 매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동일한 기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등,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공공외교는 전 정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예산과 관련한 것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2012년 9월 7일자 아사히신문의 다음과 같은 보도이다.

외무성은 7일의 내년도 예산 개산(概算)요구에서 독도(일본명: 다케

시마)를 고유의 영토로서 국제적으로 어필하는 영토보전대책비 6억엔을 포함시켰다. 영토 보전에 특화된 국제 홍보를 위한 예산 요구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상륙에 대응하여 독도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며, 배경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의 주장을 정리한 책자와 동영상을 6개국어 정도로 번역하여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 외국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 영토 보전에 관한 심포지움의 개최와 전문가의 해외파견 등이 그 기둥이 된다.⁹⁹

전례를 중시하는 관료조직에서는 이례적으로 ‘영토보전대책비’를 6억 엔이나 포함시킨 것은 현재 일본이 얼마나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한 공공외교에 힘을 쏟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3) 주요 행위자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긴요하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공공외교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상, 관방장관, 외무대신과 같은 가장 고위의 정책결정자들이다.

둘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행위자는 납치문제 담당대신이라고 할 수 있다. 납치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인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조직도(<표 III-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책본부장은 수상이 맡고 있지만, 납치문제 담당대신은 부분부장·관계부성 연락회의 의장·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장이라는 세 개의 직책을 맡아 실질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납치문제 담당대신은 다른 대신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개각이 있을 때마다 가장

⁹⁹ 『朝日新聞』, 2012년 9월 7일.

빈번하게 교체가 되고 있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이후만 보더라도 약 3년 동안 여섯 번이나 대신이 교체되어 현재의 다나카 게이슈(田中慶秋) 대신이 7번째 대신이 되며, 전임인 마쓰바라 진(松原仁)은 9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이렇게 자주 교체된다는 것은 실은 이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 같은 사실은 2011년도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예산의 약 30%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¹⁰⁰ 2012년 1월 31일자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민간인 중에는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문제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의 부모인 요코타 시게루(横田滋), 요코타 사키에(横田早紀江)이다. 한편 ‘구출하는 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 중에는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와 같이 극우파 지식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이 ‘구출하는 회’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측면도 있다. 역사 인식 문제,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이슈에 대하여 가장 극우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니시오카와 같은 인물이 회장으로 있는 이 조직의 활동이 한국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독도 문제와 관련한 공공외교가 전 정부적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행위자를 한정지어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상과 외무대신에서부터 북동아시아과의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행위자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한 공공외교를 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¹⁰⁰ 『産経新聞』, 2012년 1월 31일.

(4) 통일관련 공공외교 대상(언론, 학계, 기업, 학생, 일반 등)

후술하는 한반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본은 한국의 언론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에 대한 공공외교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결정적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수상·관방장관·외무대신의 담화의 형태로 행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담화의 내용이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언론에 의해 그것이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와 관련된 공공외교의 경우도 물론 한국의 언론을 매개체로 하는 공공외교가 중요하겠지만,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직접적으로 대북방송을 행한다거나 만화·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납치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만화 『메구미(メグミ)』를 한국어·일본어·중국어로 제작하였고,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국어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공공외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 공공외교의 대상은 한국 국민이라기 보다는 자국민 혹은 국제사회가 될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수단은 북동아시아과가 10개 국어로 제작한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인데, 이것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배포되고 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다만 주한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가 수상관저 및 외무성의 홈페이지와 다른 점은 수상관저와 외무성의 홈페이지의 경우 메인화면에 독도 문제

가 게재되어 있는 반면,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메인화면에 독도 문제가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일한관계’라는 항목을 클릭해야 비로소 화면에 나타나며, 여러 이슈 중에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을 의식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는 거의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내용

(1)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 관련 일본의 공공외교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기본 입장(“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을 한국 국민과 북한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공식 입장에 입각한 코멘트를 하는 형태의 공공외교가 행해져 왔다. 이하에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일본의 공공외교이다. 이 방문은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에 가장 부합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양 방문 사실을 한국이 공표한 2000년 4월 10일 당시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무대신의 담화에는 그와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행해지는 것이 간요(肝要)하면서도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이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의 남북정상

회담 개최발표는 남북의 대화로 향한 양 당국 간의 의욕의 표명이라고 생각되며, 회담이 실현되면 사상 최초의 것이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의 발표에 이르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 온 ‘포용정책’의 흐름에 따른 것이며, 이것을 환영하고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어 의미 있는 의견교환이 행해질 것을 희망함과 아울러, 이것을 계기로 하여 금후 남북대화가 더욱더 진전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다.¹⁰¹

이 담화에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은 남북한 어느 한 편에 호의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이 담화를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통일과 관련하여 가시적이고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일본이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주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등 상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평양 방문 전후의 공공외교이다. 고이즈미 수상은 9월 17일 행해진 기자회견의 모두(冒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은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후에도 한미일 3개국을 비롯한 관계각국이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 지역의 커다란 평화를 조성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북일평양선언의 원칙과 정신이 성실히 지켜진다면, 북일 관계는 적대관계로부터 협조관계로 향하여 큰 발걸음을 시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북한과 같은 가까운 나라

¹⁰¹ 河野外務大臣談話,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12/dkn_0410.html>.

와의 사이에서 우려를 불식하고, 서로 위협을 주지 않는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정부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¹⁰²

여기서는 단순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의 단순한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2002년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9월에 신의주 행정특구·10월에 개성공업지구·11월에 금강산 관광특구의 설치 등 남북한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던 해였고,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던 9월 17일은 제5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9월 13일~9월 18일)이 행해지던 시기였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지나긴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보다면, 고이즈미 수상의 의사표명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들에게 어필하는 공공외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례로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일본의 공공외교를 들 수 있다. 민군합동조사의 결과가 발표된 5월 20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수상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다.

1. 3월 26일에 발생한 한국해군초계함 ‘천안’의 침몰사안에 관하여 오늘 한국 정부는 사안 발생 이래 행해 온 합동조사의 결과 보고를 공표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46명의 희생자 및 그 가족 여러분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2. 우리나라는 이 조사가 한국의 군민(軍民) 및 각국의 전문가도 참가

¹⁰² 小泉総理會見要旨,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ummary.html>.

한 형태로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행해진 것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 정부는 조사 보고에 있어서 본건 사안은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었다고 판단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3.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사전에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이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하게 비난한다. 금후의 대응에 있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및 미국을 비롯한 관계각국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계·협력해 갈 생각이다.¹⁰³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일본의 한반도 기본 입장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북한의 행위는 이 기본 입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이 점을 분명히 수상의 담화라는 형태로 발표하여 한국 국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외교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한국의 매스컴에 의해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2010년 5월 21일자 조선일보의 다음과 같은 보도는 일본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상에 의해 행해진 공공외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일 낮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한국 및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회의 직후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을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

¹⁰³ 総理大臣コメント(韓国哨戒艦沈没事案に関する韓国側の調査報告発表について), <http://www.kantei.go.jp/jp/hatoyama/statement/201005/20comment_souri.html>.

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이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및 미국을 비롯한 관계 각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⁰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행한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이 실시한 2010년도 통일의식조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동 연구원은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010년의 조사항목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라는 설문에 대해 ‘미국’이라는 대답이 전년도의 68.2%에서 70.5%로 상승하여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대답도 전년도의 8.7%에서 9.6%로 상승했다.¹⁰⁵ 또한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중국’이라는 대답이 전년도의 15.8%에서 24.5%로 대폭 상승한 반면, ‘일본’이라는 대답은 전년도의 17.6%에서 10.3%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¹⁰⁶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네 번째 사례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둘러싼 일본의 공공외교이다. 일본은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일으킨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도 일본은 즉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며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다.

- 이번의 북한에 의한 포격사건은 용서하기 힘든 것이며, 북한을 강력히 비난한다. 우리나라는 금번의 포격에 의해 희생자가 나온 것에

¹⁰⁴ 『조선일보』, 2010년 5월 21일.

¹⁰⁵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p. 122.

¹⁰⁶ 위의 책, p. 125,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는 설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북한’으로 2009년에 52.7%, 2010년에 56.5%였다.

관하여, 한국 정부 및 국민에게 조의를 표함과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 북한의 포격에 의한 이번 도발행위는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한국 및 미국, 그 외의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하여 대응해 가겠다. 또한 정부의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정보수집에 힘쓰고 동시에, 유사시에 대비하여 만전의 태세를 기하겠다.¹⁰⁷

이와 같은 일본의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의 발신은 한국 국민에 대한 ‘공공외교’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1월 25일자 조선일보는 ‘지도자들의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 속에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4일 오전 긴급 대책본부를 찾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용인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¹⁰⁸고 간 나오토 수상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간 수상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기사를 읽은 독자는 일본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있어서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

우선 납치대책본부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¹⁰⁷ 外務省：北朝鮮による砲撃事件に対する政府の基本的な見解, <http://www.mofa.go.jp/mofaj/area/n_korea/hogeki_10/kk1011.html>.

¹⁰⁸ 『조선일보』, 2010년 11월 25일.

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¹⁰⁹

첫째, 북한을 향한 라디오 방송인 ‘고향의 바람(일본의 바람)’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에서는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과 일본과 북한을 둘러싼 상황·납치피해자의 가족·친구로부터의 메시지·일본의 흘러간 옛 노래 등을 방송하고 있는데, 일본어(고향의 바람)·한국어(일본의 바람)의 단파방송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어 방송에서는 매일 납치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방송하고 있다.

둘째, 2006년 6월 제정된 ‘납치문제와 그 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주간’으로 정하여 정부주최 강연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에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심포지엄은 납치문제대책본부·법무성·외무성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북한에 있어서의 인권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납치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납치문제 담당 수상보좌관, CSIS 일본부장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등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 문제』,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목표로: 북한측 주장의 문제점』, 『가족분들의 메시지』라는 세 종류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앞의 두 팸플릿은 각각 7개 국어, 4개 국어로 제작되어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대한 공공외교를 의도하여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기 위하여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목표로: 북한측 주장의 문제점』의 한국어판을 살펴보면, 북한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생사불명의 납치피해자 12명 중 8명은 사망, 4명은

¹⁰⁹ 이하의 기술은 日本国政府: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 <<http://rachi.go.jp>>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이다.

북한에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생존자 5명과 그 가족들은 송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다시 살려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북한측 주장을 소개한 후, 각각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근거로 면밀하게 반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존자의 즉시 귀국을 위한 시책과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에 관한 진상 규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앞에서 언급했지만, 요코타 메구미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하고 있다. 만화의 외국어판은 한국어·중국어·영어의 3개 국어로 제작되어 각국의 일본대사관, 총영사관 등을 통하여 배포되었고,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의 요인 등에게도 배포되었다. 현재 주한 일본문화원의 도서실에는 이 만화의 한국어판과 영어판이 비치되어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일본어판 외에 영어·중국어·한국어·러시아어로 더빙된 것과 프랑스어·스페인어·독일어·이탈리아어·타이어 자막이 나오는 것이 제작되었는데, DVD의 경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의 요인 및 보도관계자에게 배포되거나, 해외의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에 배포되었으며, 토야코(洞爺湖) 서밋 때 배포가 이루어졌다. 또한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간조직으로서 최대의 단체인 ‘구출하는 회’가 행하고 있는 주요한 공공외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¹¹⁰

첫째, 2006년 2월에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조선방송’을 지원하는 일본위원회를 발족시켜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 방송은 2005년 단파방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매일 1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 속에서 주 1회 10분에서 15분 정도 니시오카 회장이 한국어로 방송을

¹¹⁰ 이하의 기술은 ‘구출하는 회’의 홈페이지 <<http://www.sukuukai.jp/>>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이다.

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일본어로 방송을 해왔다. 또한 특정실종자¹¹¹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2003년 ‘구출하는 회’에서 분리되어 결성된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단파방송 ‘시오가제(갯바람이라는 의미)’도 실질적으로는 ‘구출하는 회’가 관여하고 있는 공공외교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매년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이 참가하는 국민집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모든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고야 말 것이다! 국민대집회’라는 구호를 내걸고 9월 2일에 도쿄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북한이 납치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2002년으로부터 10년째가 되는 해로서, 예년에 비해 더욱 대규모로 국민집회가 개최되었는데, 납치문제 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노다 수상이 민주당정권의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또한 이 집회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¹¹² 전 수상, 마쓰바라 진 납치문제담당대신,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셋째, 북한에 의한 한국의 납치피해자 가족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한반도 공공외교를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출하는 회’가 주최하는 국민집회나 국제세미나에 한국의 납치피해자 가족들 혹은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6일에 히비야공회당에서 개최된 국민집회에는 최광석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운영위원, 이옥철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표가 초청되어 발표를 한 바 있다.

¹¹¹ 이 용어는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라는 의미로, ‘구출하는 회’가 만들어 낸 것이다.

¹¹² 아베 신조는 9월 26일에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차기 수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런데 일본의 매스컴에서는 ‘구출하는 회’의 회장인 니시오카 쓰토무가 아베의 브레인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아베 정권이 다시 탄생하게 된다면 ‘구출하는 회’와 일본 정부와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 독도 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

현재 일본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까지도 독도 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를 행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올해 8월 24일 중의원에서 행해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에 대한 항의결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전 정부적 차원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노다 수상 자신이 그 선두에 서 있다. 수상관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독도의 사진이 나와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중의원의 항의 결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이 행한 모두(冒頭)발언, 8월 21일 독도 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의합당시의 수상의 발언 전문(全文)과 동영상 파일이 나와 있다. 노다 수상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다 수상은 24일의 발언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 측으로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자국이 생각하는 정의를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입장이 다른 2개국 사이에서 건설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비추어보아,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정에서 논전을 벌여 결판을 내는 것이 왕도(王道)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게는 지금부터도 국제법에 의거한 해결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끈기 있게 호소해 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국회로부터 받은 결의의 취지를 명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 입각한 대외발신을 강화함과 아울러, 독도의 영토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체제 강화 등도 검토해 가겠습니다.¹¹³

¹¹³ 竹島問題について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http://www.kantei.go.jp/jp/headline/takeshima.html>>.

이 발언에 깔려 있는 논리는 일본은 당당하게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무엇이 두려운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 공공외교의 기본적인 논리가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도 같은 논리가 등장한다. 수상관저나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독도 문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수상관저의 경우에는 독도 문제의 개요 및 수상의 연설문이 나온 후에 이 팸플릿의 일본어판 파일이 나오고, 외무성 홈페이지의 경우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이 간략하게 나온 후 바로 10개 국어로 된 이 팸플릿의 파일이 등장한다. 팸플릿은 10개 항목에 걸쳐서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을 반박하고 일본 측 주장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10번째 항목이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팸플릿이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앞의 노다 수상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당당하게 국제법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데에 반해 한국은 떳떳하지 못하게 정당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사료된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공공외교의 전략은 이처럼 ‘당당한 일본과 떳떳하지 못한 한국’이라는 단순화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내년부터는 동영상까지 동원하여 이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추측된다.¹¹⁴

¹¹⁴ 『朝日新聞』, 2012년 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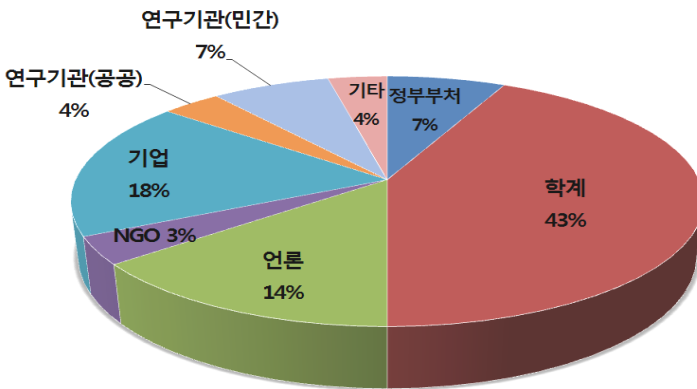
3. 일본 공공외교 및 한반도 통일관련 전문가 인식조사

가. 일본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 설문 대상자 및 방법의 특징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를 상대로 일본의 일반적인 공공외교 및 한반도 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설문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반도 관련 연구에 관계하는 학계, 연구기관 인사와 한반도 문제를 취급하는 언론계 인사, 한국에 주재하는 기업인,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인사, 한반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NGO관계 인사들로 모두 일본인이다. 일본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계하는 실무자와 연구자 중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학계가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업인 18%, 언론인 14%, 민간 연구기관, 7%, 정부부처 7%, 공공연구기관 4%, NGO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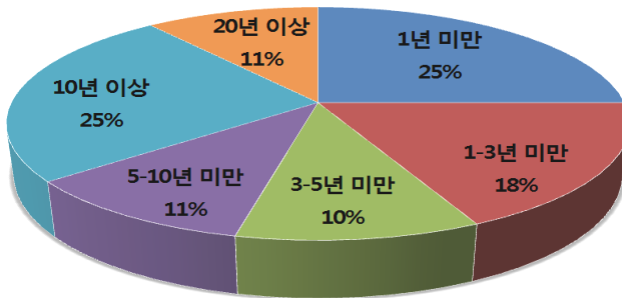
〈그림 Ⅲ-1〉 소속 기관



I
II
III
IV

또한 이들이 한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보면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25%로 가장 많고, 다음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8%, ‘5년 이상 10년 미만’과 ‘20년 이상’의 11%,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였다. 즉 한반도 관련 업무에 경험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는 1년 미만이 25%에 불구하고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3년 이상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57%로 응답 내용의 유의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2〉 업무 경력



설문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단계는 설문지를 검토하여 더 심층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하여 답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답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설문지를 통하여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설문지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에게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설문지의 내용과는 별도로 일본의 공공외교 및 한반도 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의견을 청취, 전반적인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2) 설문 내용의 특징

설문의 내용은 일본의 공공외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한반

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은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일본 공공외교의 일반에 대한 문항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공공외교의 정의를 제시한 뒤, 일본 공공외교의 목표, 수단, 추진체계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제2부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설문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과 장애요인, 관련 국가, 예상 시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대책 등을 설문하였다. 제3부는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분야의 공공외교에 대한 설문으로 응답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정의한 뒤에 일본의 한반도 공공외교의 현황 등을 설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일본이 취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정책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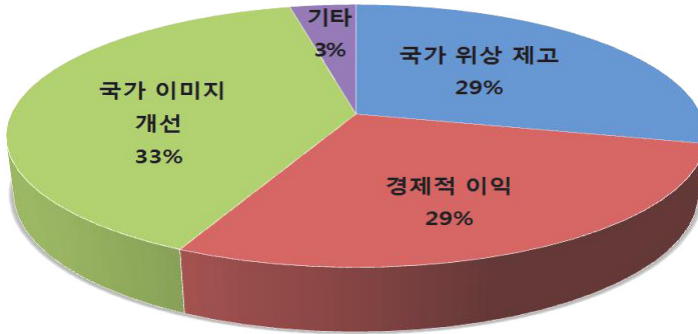
즉 일본의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일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본의 공공외교는 존재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의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이 세계 여러 나라보다는 한국에서의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제 정세 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일본의 공공외교 현황

(1) 일본 공공외교의 목표 및 추진체계

공공외교에 대해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상대방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켜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여,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라고 정의를 한 뒤에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국가 이미지 개선’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가 위상제고’와 ‘경제적 이익’이 29%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는 이미지 개선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Ⅲ-3〉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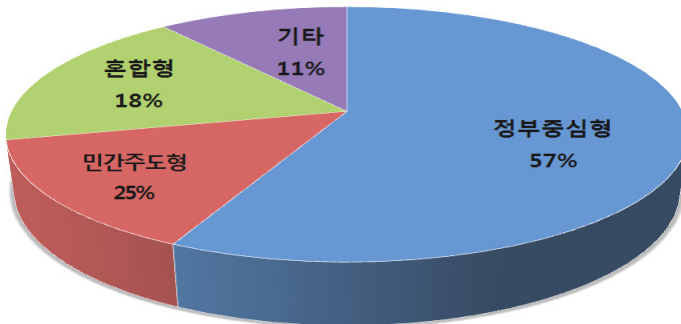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일본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 ‘경제적 이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Ⅲ-6〉 국가별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국가위상제고	50.0%	24.1%	41.7%	35.0%
안보이익제고	18.2%	10.3%	4.2%	7.8%
경제적이익 제고	4.5%	20.7%	20.8%	19.4%
국가 이미지 개선	13.6%	41.4%	33.3%	33.0%
기타	13.6%	3.4%	0.0%	4.9%

아울러 이를 추진하는 추진체계를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정부 중심형,’ 민간이 중심이지만 정부가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하는 ‘민간 주도형,’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혼합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 중심형’이 5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민간 주도형’은 25%, ‘혼합형’은 18%가 대답하고 있으며,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기타’도 11%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 정부부처 종사자는 물론이고 학계와 언론계 모두 정부 중심형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기업 종사자들은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을 같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즉 일본의 공공외교의 중심에는 일본 정부가 있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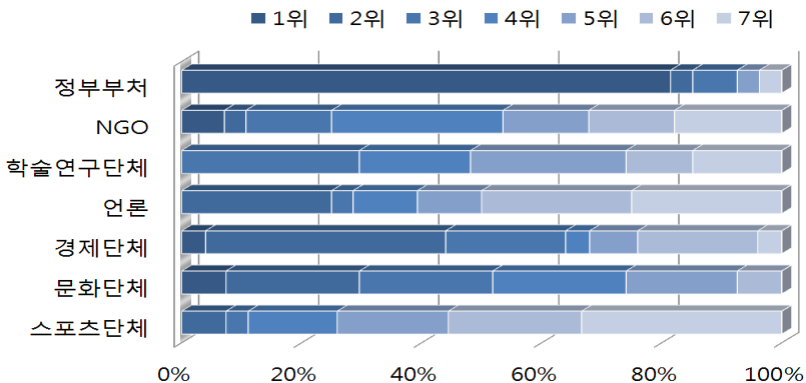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2)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및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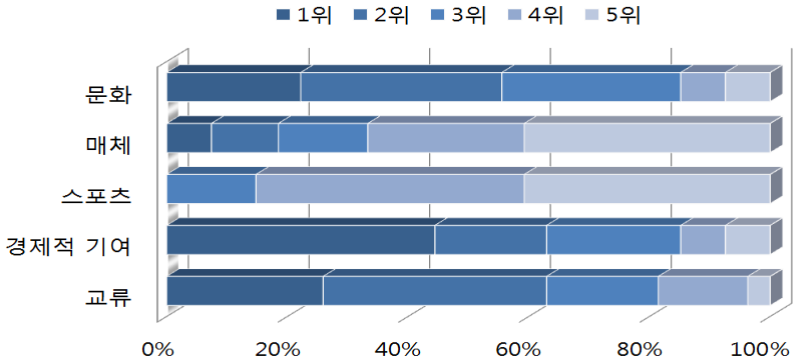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주요 행위자에 대한 예시를 정부부처, NGO, 학술 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로 제시하고 그 순위를 질문한 결과, 제1위로는 정부부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위로는 경제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3위로는 문화단체가 가장 많았다. 추진체제가 정부 중심형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주요 행위자도 정부부처로 보고 있으며,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일본 공공외교의 특성상 경제단체를 두 번째로 중요한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로 사용하는 공공외교의 수단은 무엇인가를 문화(음식, 예술), 매체, 스포츠, 경제적 기여(ODA, 투자), 교류(포럼, 인적교류, 초청 유학생)의 예시를 제시하여 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1위로는 경제적 기여가 가장 많았고, 2위로는 교류를 선택하였다. 그 뒤로 3위로는 문화, 4위로는 매체 등을 꼽고 있다. 즉 경제적 기여를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이러한 사실은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에 대한 응답 중 1위로 경제 자산, 문화자산, 2위로 지식자산, 인적자산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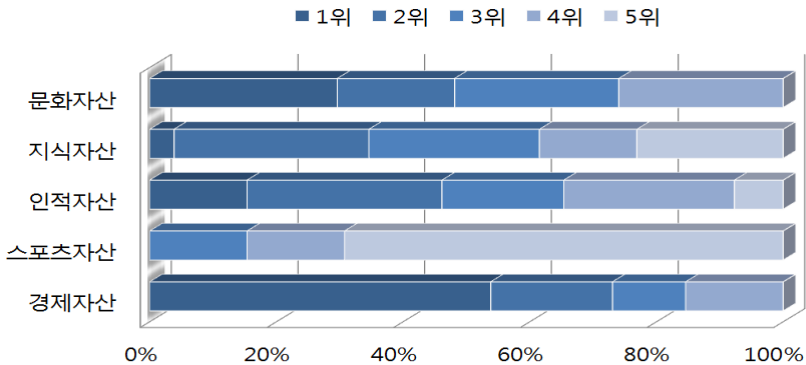
〈그림 Ⅲ-5〉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그림 III-6〉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그림 III-7〉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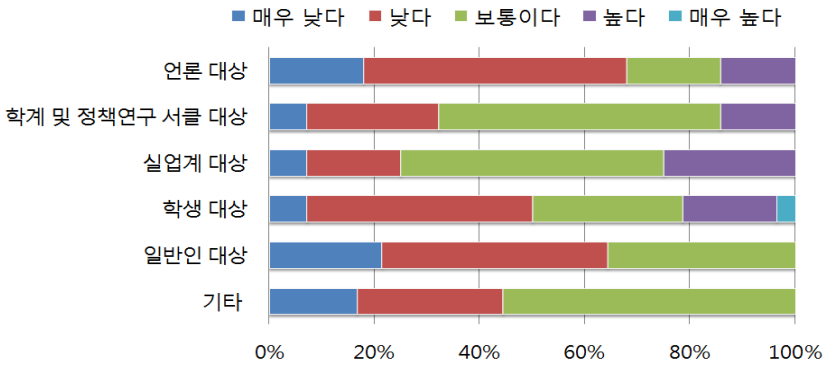
(3) 일본 공공외교의 프로그램 및 지역

일본 공공외교의 프로그램의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실업계 대상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학생 대상·언론과 학계 및 연구서클 대상은 같은 비율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외교의 수단 및 자산을 경제적 기여와 경제 자산이라고 응답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공공외교는 경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높다’와 ‘매우 높다’에 대한 응답보다는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에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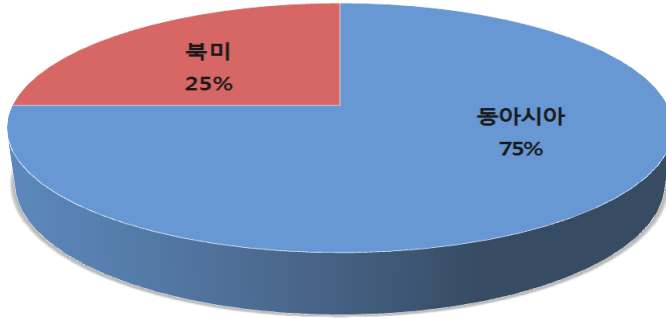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일본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소속별로는 경우에는 응답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계와 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실업계 대상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부처 종사자의 경우에는 학생대상의 프로그램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III-8〉 일본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비중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도 일본이 경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대상지역의 예시로 유럽·중동·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북미·오세아니아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일본의 공공외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집중 현상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교하였을 때 일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국도 동아시아를 가장 주요한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이 더 큰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중동, 러시아는 유럽을 주요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9〉 일본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표 Ⅲ-7〉 국가별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전체
대상지역	유럽	4.5%	6.9%	91.7%	0%	24.3%
	중동	59.1%	0%	0%	0%	12.6%
	동아시아	31.8%	65.5%	0%	75.0%	45.6%
	아프리카	0%	13.8%	0%	0%	3.9%
	중·남미	0%	3.4%	0%	0%	1.0%
	북미	4.5%	10.3%	8.3%	25.0%	12.6%

(4) 일본 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이러한 일본 공공외교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 먼저 일본에서 설문지에서 제시한 공공외교의 정의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와 ‘아니다’를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정확한 의미의 공공외교가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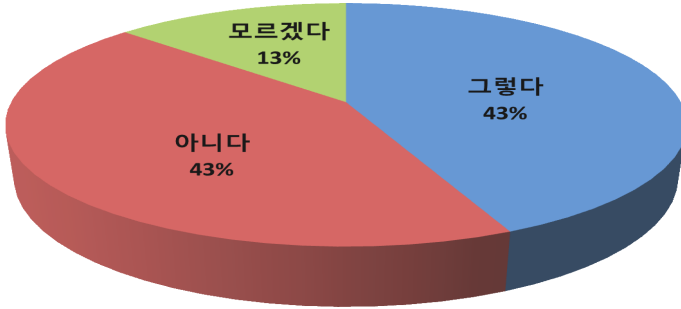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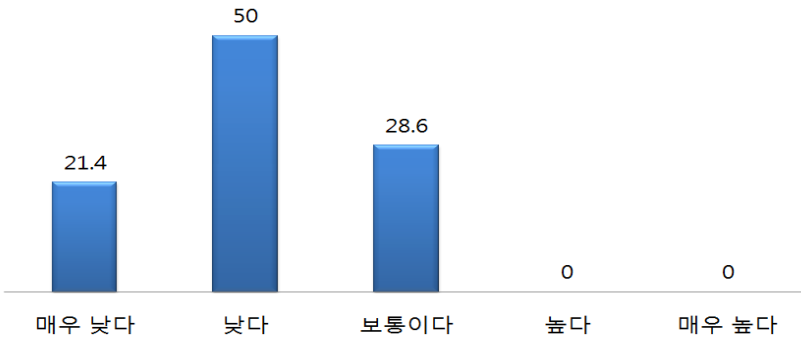
〈그림 Ⅲ-10〉 일본 공공외교의 실제 시행 여부



또한 일본의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정의한 공공외교의 정의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매우 낮다’가 21.4%, ‘낮다’가 50%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28.6%인 것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는 71.4%이며, ‘높다’와 ‘매우 높다’에 대해 점수를 준 응답자는 없었다.

〈그림 Ⅲ-11〉 일본 공공외교의 성과 평가

(단위: %)



즉 일본에서는 정확한 의미의 공공외교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의미의 공공외교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할 수 없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성격과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교를 하였을 때에도 유난히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공공외교 성과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이다 3, 높다 4, 매우 높다 5)로 볼 경우 미국이 평균 3.0556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일본은 2.0714로 중국의 2.7586, 러시아의 2.6250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국의 평균인 2.595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국가별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비교

	평균
미 국	3.0556
중 국	2.7586
러시아	2.6250
일 본	2.0714
합 계	2.5859

다.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현황

(1)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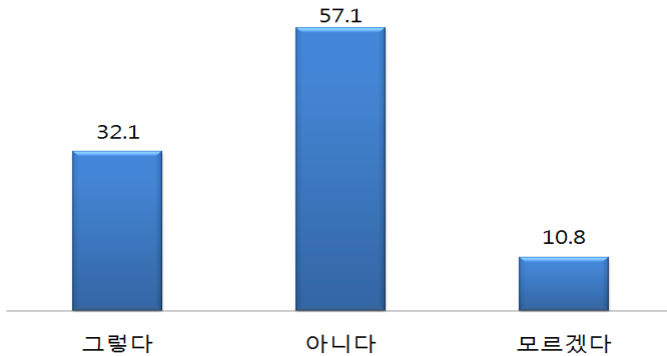
그렇다면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정책 자체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았다.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란 한반도(주변) 정세, 남북관계, 북한문제, 한반도 통일 등에 관련된 공공외교를 일컫는다’로 정의하여, 일본의 한반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한 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7.1%가 ‘아니다’에 응답하고 있다.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 32.1%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 비율은 일본

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평가('아니다' 43%)보다도 높은 것으로, 한반도 관련 공공외교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의 이러한 답변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 매우 의외의 결과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경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아니다'라는 답변보다 많은 것에 비해 일본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즉 동아시아에서 자유 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한국과 외교적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한반도 통일과 직접적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일본이 한반도 통일관련 외교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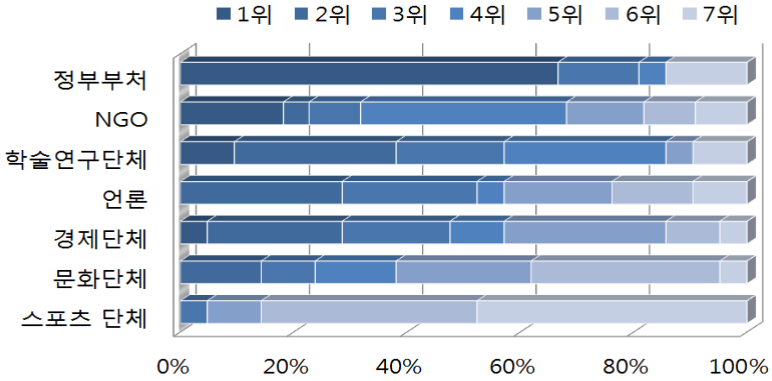
〈그림 Ⅲ-12〉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여부 평가

(단위: %)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수행 담당 기관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인 공공외교와 같이 정부부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학술단체, 3위로는 언론과 경제단체로 일반적인 공공외교 분야에서 2위를 경제단체로 생각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정부가 중심이 되고, 다음으로 학술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III-13〉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주요 수행기관



(2)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목표와 대상

일본에서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 대상을 어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본의 한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 관련한 일본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정책 이해라는 응답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주요 대상의 비중을 순위별로 설문한 결과, 1위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언론계이고 2위중에서는 경제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한국의 언론계를 통하여 전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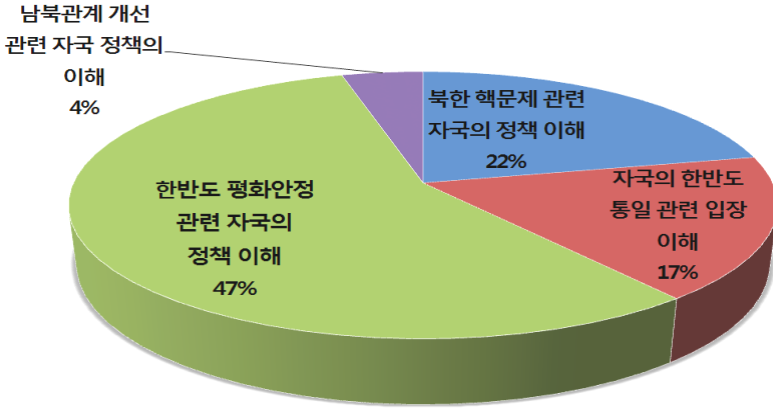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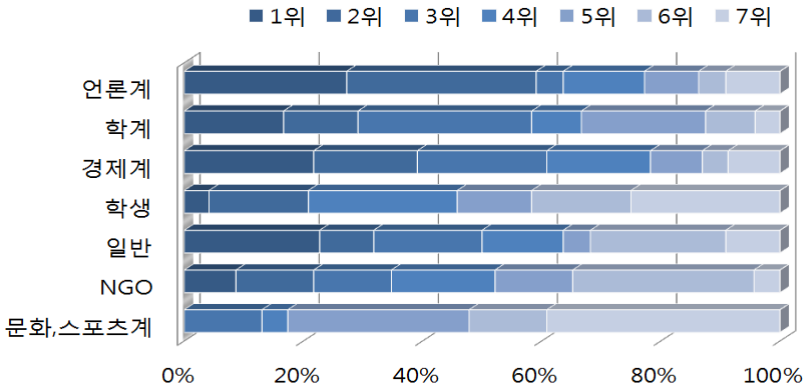
III

IV

〈그림 Ⅲ-14〉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목표



〈그림 Ⅲ-15〉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의 공공외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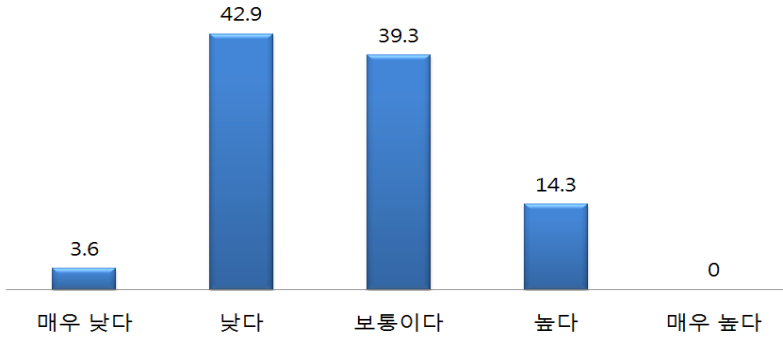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론계를 통하여 일본의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 ‘낮다’의 응답 비율이 42.9%로 가장 크고, 다음이 ‘보통이다’가 39.3%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낮다’와 ‘낮다’를 합쳐 46.5%이다.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체류

한 경험이 있고 일본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들과 교류가 많은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혹은 경험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도를 5점 척도(‘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이다’ 3, ‘높다’ 4, ‘매우 높다’ 5)로 하였을 경우에도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3.8750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미국으로 3.7143이며 일본은 2.6429로 가장 낮은 점수이다.

〈그림 III-16〉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단위: %)



〈표 III-9〉 한국인의 호감도 평가

	평균
미 국	3.7143
중 국	2.9310
러시아	3.8750
일 본	2.6429
합 계	3.2353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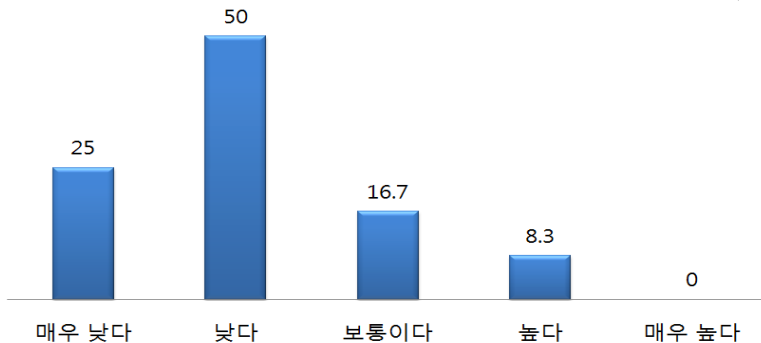
IV

(3)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성과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의 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는가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 낮다’와 ‘낮다’에 응답한 비율이 25%와 50%로, 75%가 일본 정부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일본 공공외교의 평가와 동일한 것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자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분야의 공공외교의 성과를 5점 척도(‘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이다’ 3, ‘높다’ 4, ‘매우 높다’ 5)로 하였을 경우에도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20937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미국으로 2.5833이며, 일본은 2.0833으로 가장 낮은 점수이며, 전체 평균인 2.6167보다도 낮은 유일한 국가이다.

〈그림 III-17〉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

(단위: %)



〈표 III-10〉 자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

	평균
미국	2,5833
중국	2,7000
러시아	2,9375
일본	2,0833
합계	2,6167

구체적인 예로 일본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한국인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에서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 한국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많은 42.9%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3.6%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5%인 반면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조금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32.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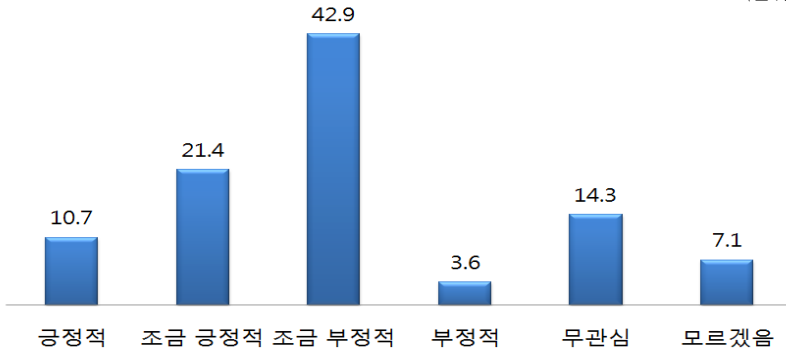
또한 ‘일본은 일본인 북한 납치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할 것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도 ‘일본의 태도는 국제 공조의 측면에서 볼 때 약간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35.7%로 가장 많고, ‘일본의 태도는 국제 공조를 깨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가 14.3%였다. ‘일본의 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고 생각한다’와 ‘일본의 태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충분히 공감한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28.6%와 3.6%로 한국인들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I
II
III
IV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즉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의 공공외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는 증거가 한국인들이 한반도 관련 일본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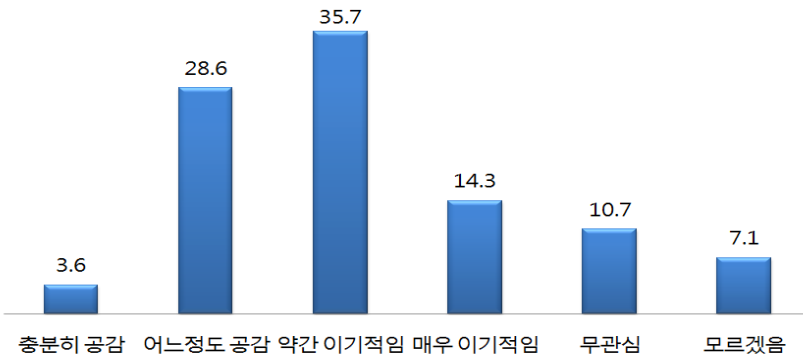
〈그림 Ⅲ-18〉 일본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단위: %)



〈그림 Ⅲ-19〉 일본의 주장(일본인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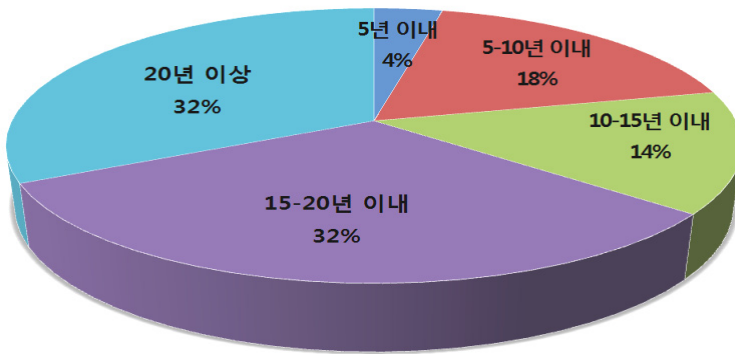
라. 한반도 인식으로 본 일본 공공외교의 전망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낮았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 자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반도의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시기가 언제라고 예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5년에서 20년 사이’와 ‘20년 이상’이 각각 32%로 가장 많아 한반도 통일을 장기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0〉 한반도 통일 예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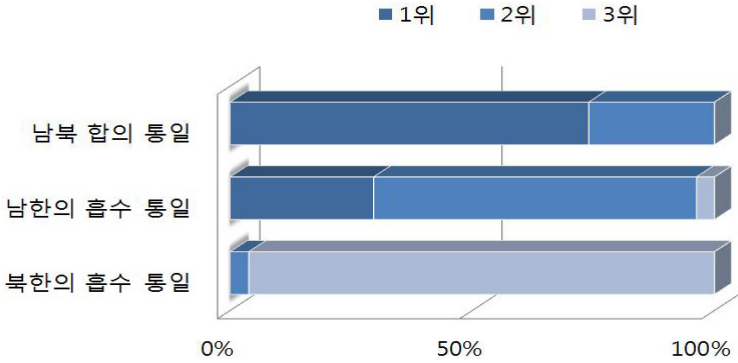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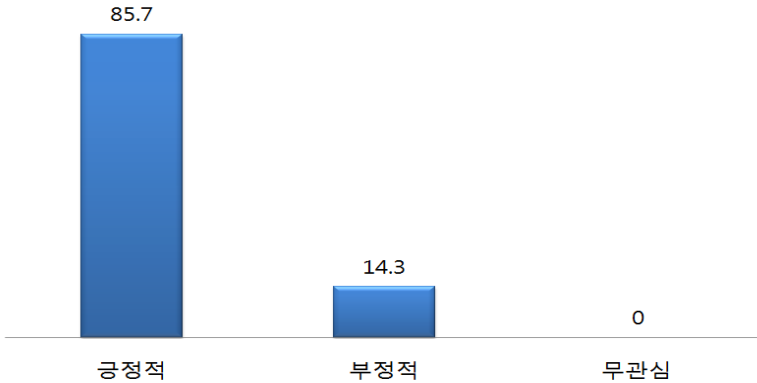
〈그림 Ⅲ-21〉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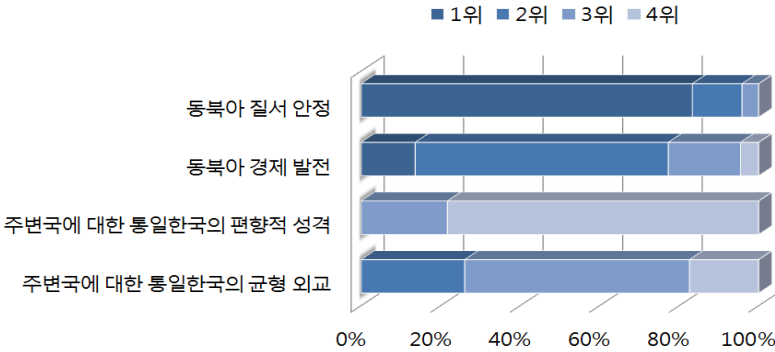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 질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장애요인을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생각하여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2〉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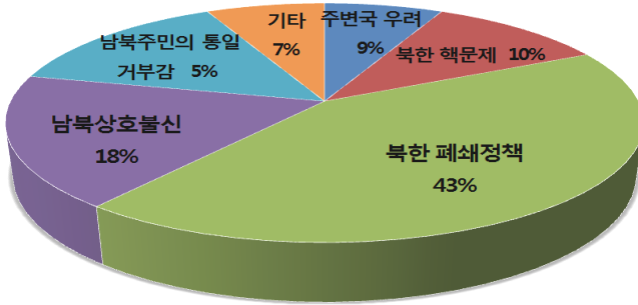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Ⅲ-23〉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유



〈그림 Ⅲ-24〉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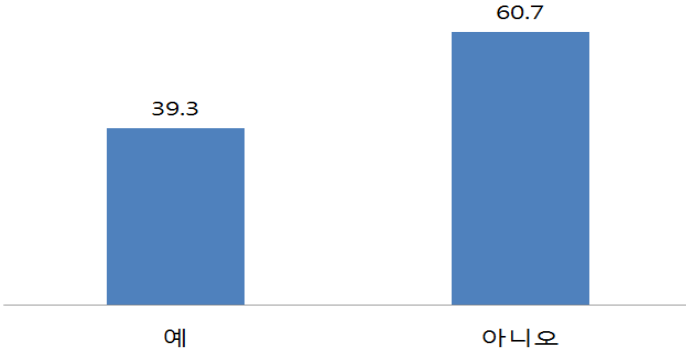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한의 정세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희망을 담은 답변을 하고 있다. 먼저 ‘귀하는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급격한 정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0.7%가 ‘아니오’ 라고 답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예’라는 응답 가운데 그 형태에 대한 응답으로 ‘쿠데타’와 더불어 ‘시민혁명,’ ‘개혁 리더십의 등장’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 단기간 내에 정치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 가운데 희망적인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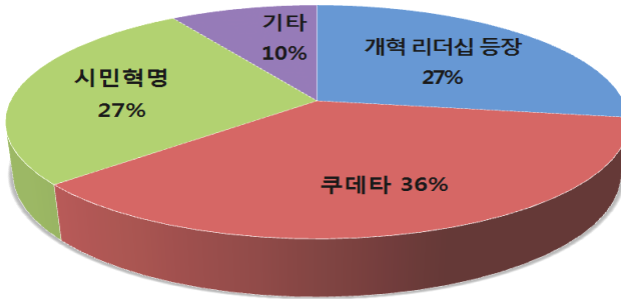
I
II
III
IV

〈그림 Ⅲ-25〉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급변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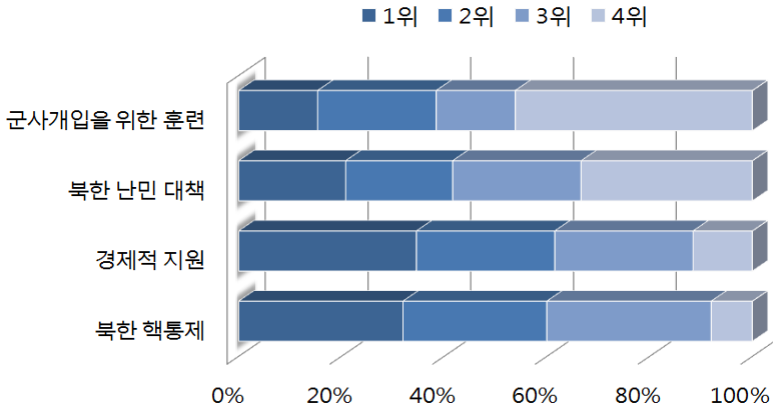


〈그림 Ⅲ-26〉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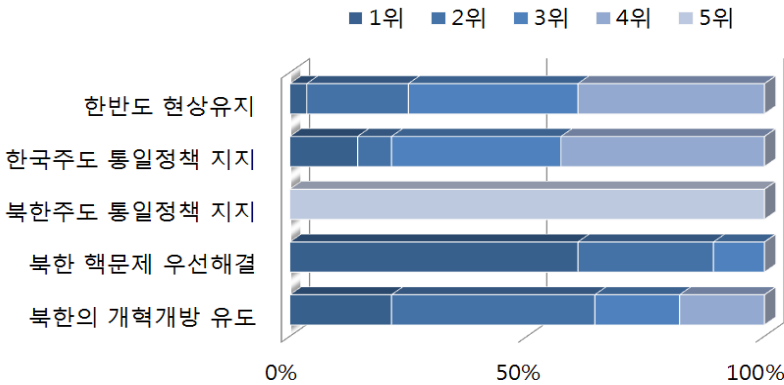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일본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경제적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북한 핵통제’를 꼽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로 일본이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사항에는 ‘북한 핵문제 우선 해결’을 꼽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핵통제’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에 언론과 기업 종사자들은 북한의 난민대책을 우선순위로 꼽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 Ⅲ-27〉 일본이 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의 대비



일본이 북한의 핵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에서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서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정책으로 ‘북한 핵문제 우선해결’을 압도적인 비율로 꼽고 있다.

〈그림 Ⅲ-28〉 일본이 수행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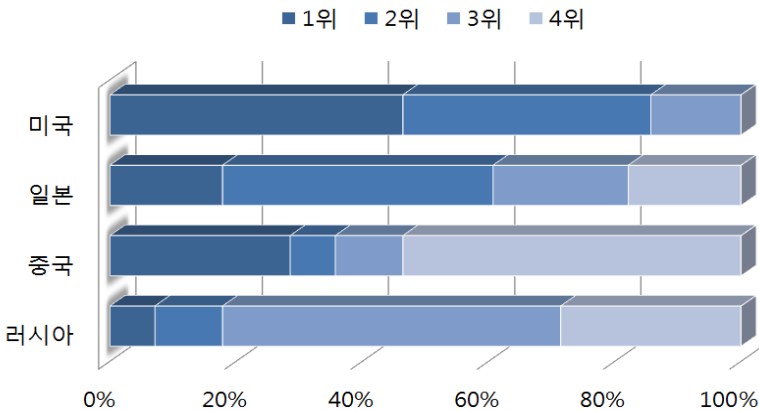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한반도 통일이 단기간에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핵문제 등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현황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한반도 전문가로서 본인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응답하였다. 먼저 ‘한반도 주변국 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순위별로 나열하라’는 설문문에 대해 1위와 2위로 각각 미국과 일본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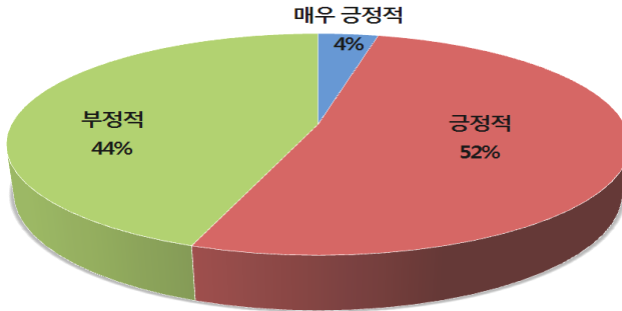
〈그림 Ⅲ-29〉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국가



또한 ‘한국 국민들이 통일과정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할 것 같은가’에 대한 설문문에 ‘매우 긍정적 역할’과 ‘긍정적 역할’에 응답한 비율이 56%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44%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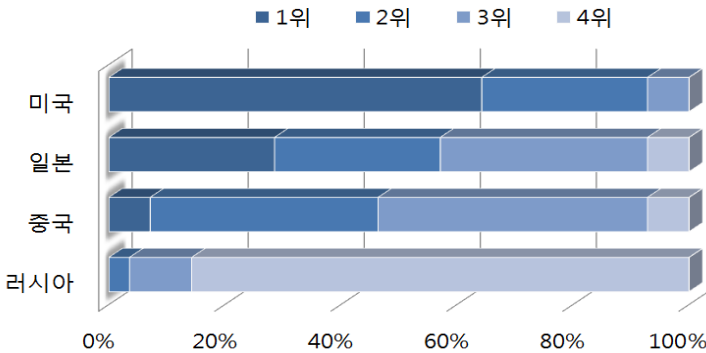
낮은 비율은 아니지만,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림 III-30〉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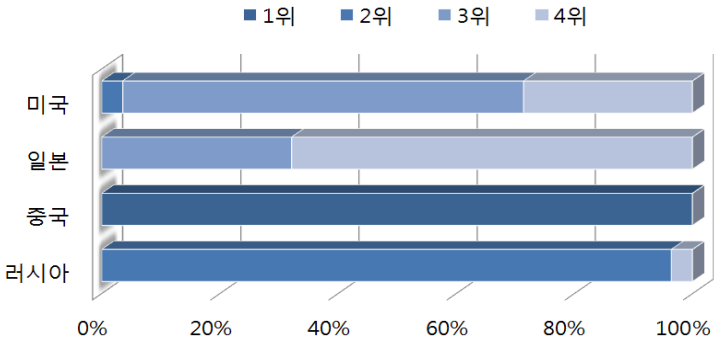
한국 국민들이 친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일본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4국 중 한국과 가장 친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순위별로 나열하라’는 질문에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친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 한국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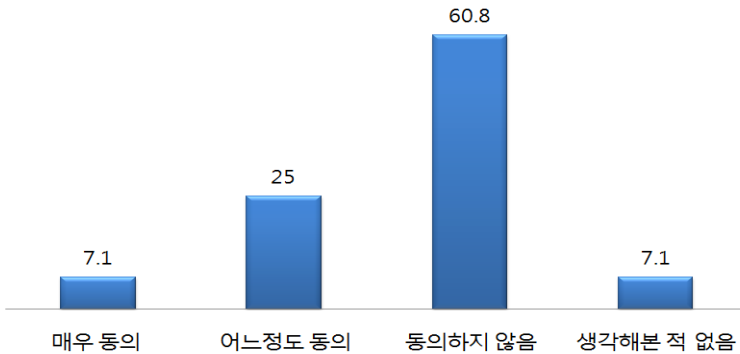
I
II
III
IV

〈그림 III-32〉 북한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



이올려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반도 주변국가 국민들 중 일본인이 한반도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만연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신은 동의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는 25%와 7.1%에 불과하여, 한국인들도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림 III-33〉 한국인들의 예상에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이미지에의 동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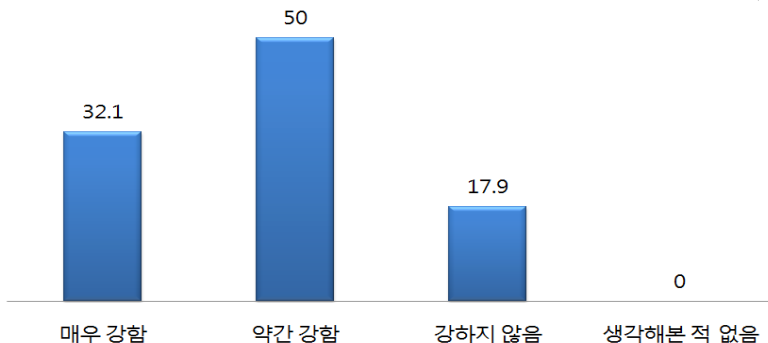
즉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반도 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전망

한반도 통일 등과 관련된 일본의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왜곡된 역사로부터 생성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문제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한반도 관련 일본의 공공외교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의 정도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로 응답한 비율은 32.1%이고, ‘약간은 강하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50%로, 82.1%가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반일 감정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4〉 한국인의 반일 감정 정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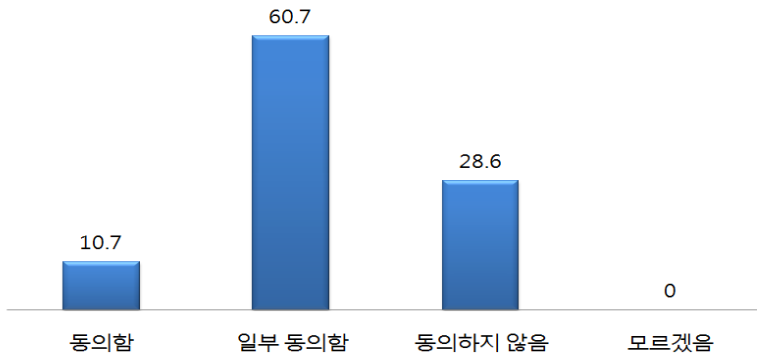


I
II
III
IV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재일 한국인 차별 인식에 대한 조사이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하다는 인식이 한국인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신은 동의하는가’라는 설문에 ‘동의한다’와 ‘일부 동의한다’가 각각 10.7%와 60.7%로 동의하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35〉 재일 한국인 차별에 대한 한국인 인식에의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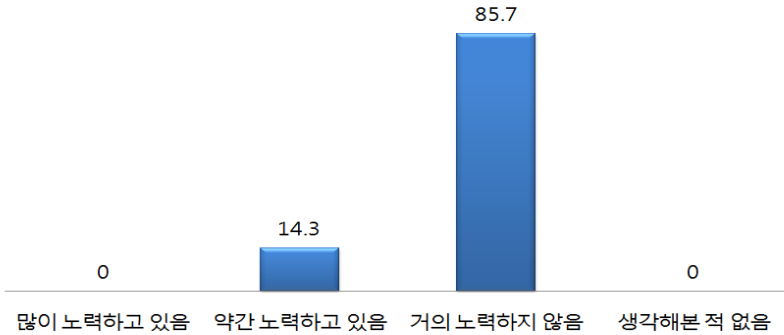
(단위: %)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의 차별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인은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가 85.7%로 압도적으로 많고 ‘약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14.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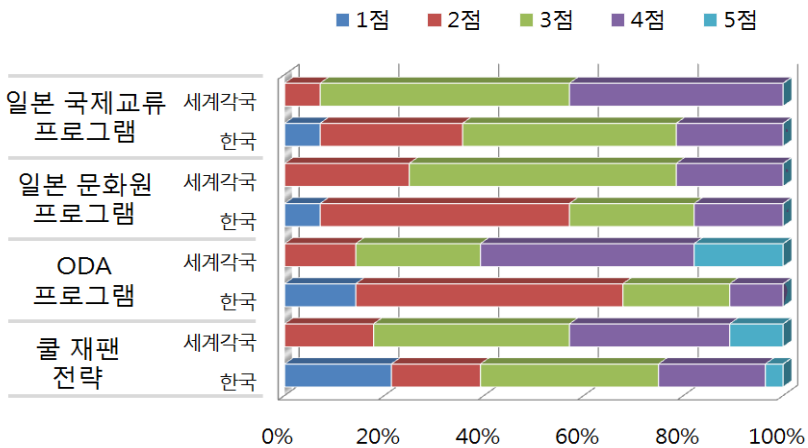
〈그림 Ⅲ-36〉 재일 한국인 차별 관련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한 한국인 인식

(단위: %)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가 그다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인 ‘일본 국제교류기금 프로그램,’ ‘일본문화원 프로그램,’ ‘ODA 프로그램,’ ‘쿨재팬 전략’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세계 각국과 비교하는 설문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 성과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림 Ⅲ-37〉 일본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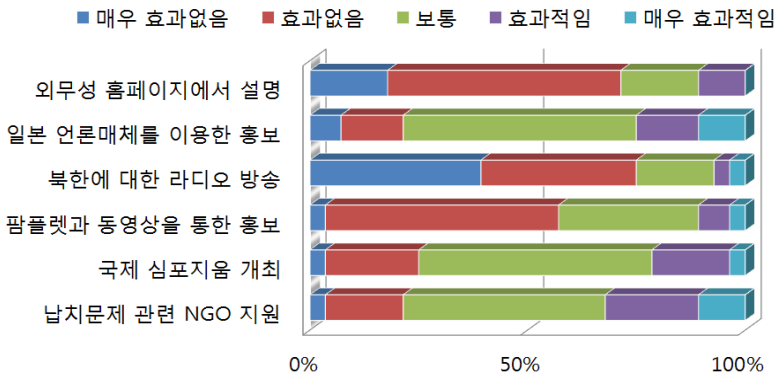
I
II
III
IV

그렇다면 대 한반도 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은 어떠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가늠해 보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공공외교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납치문제나 동일본 대지진 풍평피해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례에서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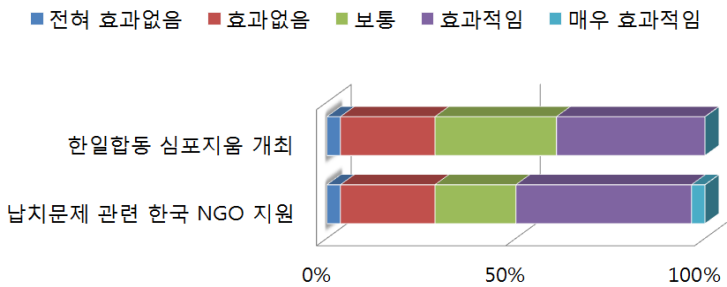
‘일본 외무성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각각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은 ‘납치문제 관련 NGO 지원’이었으며, 다음이 ‘일본 언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이었다. 반면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으로는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설명,’ ‘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이었다. 납치문제 관련 NGO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은 프로그램 자체의 실시 여부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외무성 홈페이지에서의 설명이나 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은 반응을 즉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II-38〉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공공외교 효과 정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문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과 유사한 답변을 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심각성을 한국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후, ‘한일 합동 심포지움 개최’와 ‘납치 문제 관련 한국 NGO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결과, ‘납치 문제 관련 한국 NGO 지원’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보통이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던 반면에 ‘한일 합동 심포지움 개최’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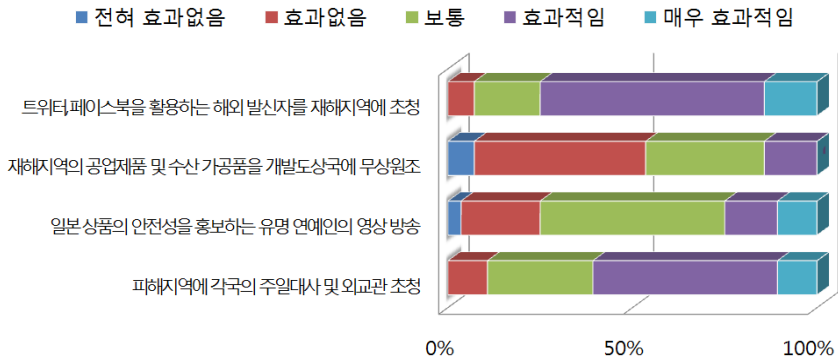
(그림 III-39)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한국인 대상 활동과 예상 효과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확인과 반응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풍평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써 다음과 같은 공공외교를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들 각 대책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 해외 발신자를 재해지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나 ‘피해지역에 각국의 주일 대사 및 외교관 초청’ 프로그램에 대해선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피해지역의 공업제품 및 수산 가공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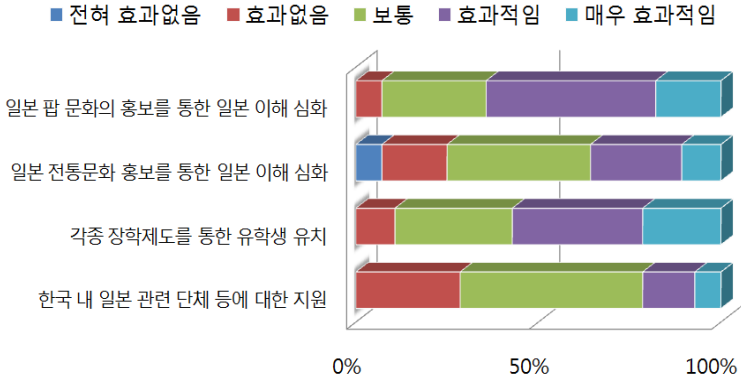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하는 프로그램이나 ‘일본 상품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유명 연예인의 영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림 III-40〉 동일본 대지진의 평평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한 공공외교의 효과



반면에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 완화를 위한 공공외교 프로그램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 등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본국제교류기금이나 일본 문화원 등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실제 공공외교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일본의 팝문화의 홍보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 심화’ 항목이었으며, 다음으로 ‘각종 장학제도를 통한 유학생 초청’ 항목이었다. 반면, ‘한국 내 일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목은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림 III-41) 한국인의 반일감정 완화를 위한 일본의 공공외교 프로그램과 그 효과



이러한 사실로 보아 현재 매우 저조한 일본 공공외교의 추진 실적, 특히 한반도 관련 공공외교의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공공외교 프로그램과 장기적이고 가시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에 차별성을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가능성은 없으며, 일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 일본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 정부 중심의 공공외교의 추진

일반적으로 공공외교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기업과 민간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정부중심형의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로 경제단체나 문화단체보다는 정부부처를 꼽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벗어나

I

II

III

IV

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외교의 실시 자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공공외교의 실시 여부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의 응답율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2) 경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외교

일본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여를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자산을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매체를, 러시아는 문화를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될 수 있는 항목이다. 일본은 경제지원 체제의 하나인 ODA를 주요한 공공외교 수단 및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는 것을 공공외교의 목표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3) 한국인들의 대일본 인식의 제고의 필요성 인식

먼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 한일 간의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인 재일 한국인 문제나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일본의 정책이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한국에서의 성과가 세계적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반도와 관련한 공공외교의 목표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일본의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

일본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다음으로는 일본일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가장 친밀도가 높은 것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5) 일본과 직접 관련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경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통제를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들에 대한 공공외교의 목표에도 북한 핵문제에 관련한 일본의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다각적 프로그램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중의 하나가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이 사건은 북한과 일본이 관련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I

II

III

IV

내용을 갖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일본이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이 추진한 프로그램에 대해 일방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전달이나 반응을 확인할 수 없는 프로그램보다는 관련 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심포지엄 지원 등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인의 반일감정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사안의 대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문화 홍보를 통한 일본문화 이해와 같이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유학생 유치와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일본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IV

결론

이하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성’을 정리하고,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시사점’과 ‘대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과제’를 제시하겠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항목의 모두(冒頭)에 공통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표를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

1.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성

〈표 IV-1〉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성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유형	정부주도형
	특 성	경제중시, 문화중시, 공보중시
	성 과	평화국가·문화국가이미지 구축, 안보·경제적 이익과의 연계에 성공
	한 계	종합적인 전략과 사령탑의 부재, 국가브랜드전략의 부재, 취약한 쌍방향성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주요 목표	일본의 평화통일지지 입장, 납치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남북한과 국제사회에 이해시키는 것
	주요 수단	수상 및 관방장관 등의 담화, 라디오, 인터넷, 영상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연회와 국제세미나의 개최 등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의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정부주도형 공공외교,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외교에 주력, ODA를 공공외교의 한 방편으로 생각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공공외교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대일본 호감도 제고의 필요성 인식,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 북한 핵문제 해결을 한반도 관련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인식

가. 일본 공공외교의 체계 및 운영

일본에서는 우리의 공공외교에 해당하는 용어로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퍼블릭 디플로머시)’를 사용하고 있다.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용

I

II

III

IV

어가 정착되기까지는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었지만, 2003년 발행된 『새로운 시대의 외교와 국제교류의 새로운 역할: 세계여론 형성예의 일본의 본격적 참가를 지향하여』라는 일본 외무성 소관의 특수법인인 국제교류기금의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래의 정책 홍보 차원을 넘어 인적·지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하는 인물 교류와 과제 해결형의 대화·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 활동을 국제교류기금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후 2004년 외무성의 기구개혁으로 대외홍보와 국제문화교류가 부분적으로 재통합되어, 홍보문화교류부로 개편하면서 공공외교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외교청서』에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이 해의 일이었다. 일본의 공식적인 공공외교 조직은 외무성의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 하에 공보문화외교전략과·보도과·문화교류해외공보과 3과가 있으며, 공보문화외교전략과는 국내공보실·IT공보실·공청실의 3실·문화교류해외공보과는 국제문화협력실·교류실·국제보도관실의 3실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은 국제교류기금, 국제협력기구와 함께 일본의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외교 대상국 현지의 조직으로 해외공관, 즉 대사관을 중심으로 대사관 산하의 공보문화원이 현지 국제교류기금사무소와 국제협력기구사무소, 일본 정부 관공국사무소와 연계하여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공공외교는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는데, 일본의 공공외교가 정부중심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유형을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정부가 공공외교를 주도하는 정부주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공공외교에 있어서 전통외교에 비해 수행 주체가 다양화되고 수행과정이 개방적이지만,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부

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NGO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외무성의 외무보도관과 공보문화조직 현지에서는 해외공관의 공보문화관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ODA의 계획 수립과 집행, 평가에 NGO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공외교의 자원과 수단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일본현대문화를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NGO의 참여 기회가 확충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주도의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체계는 향후 정부 후의 민간집행 모델로 이행할 전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본 공공외교의 체계와 운영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일본 공공외교의 체계와 운영

조직 및 기구	외무보도관 공보문화조직 국제교류기금 국제협력기구	
행위자	정부	외무성 - 외무보도관 - 공보문화조직 경제산업성 - 제조산업국 쿨재팬실 해외공관 공보문화원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국제협력기구 일본 정부관광국
	NGO	일본 국제 볼런티어 센터 국제일본어 보급협회
자원 및 수단	ODA 문화교류 일본어보급 일본연구, 지적교류 일본관광촉진	

I
II
III
IV

한편 일본 공공외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중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일본은 ODA 실시에 있어서 국가 전략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개발과 산업육성 일본의 산업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시하는 ‘경제실익형 ODA 전략’을 추진해왔다. 쿨재팬에서도 경제성이 증시되어 한국과 중국이 쿨재팬의 주요 시장으로 상정되었다.

둘째, 문화 중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패전 후 일본은 전범국의 이미지를 씻고 국제사회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68년 문화청을 발족하면서 문화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공공외교에서 일본 문화, 특히 J-POP, 애니메이션, 일본 영화 등 현대 문화를 중시하게 된 것은 1972년 국제교류기금이 설립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을 일본 외교의 중점적 추진 요소로 격상시키고 ‘문화외교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셋째, 공보 중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외무성이 공공외교와 공보문화외교를 거의 동일한 용어로 병용하고 있는 점에 잘 나타났다고 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04년 설립된 공보문화교류부의 영어명칭은 ‘Public Diplomacy Department’였다. 또한 외무성은 일본의 공공외교 전체의 전략 책정을 어떻게 주도하여,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전문가를 포함시킨 간담회를 ‘공보문화외교의 바람직한 제도화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라고 하여 공보를 강조하였다. 또한 2012년 외무성 조직 개편으로 공보문화교류부와 외무성의 보도 조직이 통합되고, 공공외교에 있어 공보가 강조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넷째, NGO와의 협력 강조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1996년의 ODA 대강은 2003년, 2010년 개정을 거듭할 때마다 ODA 실시에 있어서 NGO와의 파트너십과 문화교류에 있어서 NGO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외

교는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NGO와의 협력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호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NGO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NGO와의 협력체제를 정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공공외교는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전전 군국주의 국가 이미지의 탈각과 평화국가, 문화국가 이미지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전후 평화헌법과 요시다노선을 기축으로 비군사적 지원을 동원하며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아시아 경제위기·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공헌해 온 일본은 평화국가, 문화국가로서 이미지 제고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외교와 안보, 경제적 이익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일본은 군사력의 제한 속에서 안보를 확보하고 일본의 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통상국가로서의 국가이익과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ODA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와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왔다. 일본의 ODA가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진 목적과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현실주의적 ODA의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 또한 문화산업의 해외전개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커다란 경제효과의 획득을 지향하고 있다. 쿨재팬 전략에 의해 패션, 문화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현재 2.3조엔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향후 18개국으로 시장을 확대해 2020년까지 8~11조엔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공공외교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전략과 공공외교 사령탑의 부재이다. 공식적으로 일본의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외무성의 외무보도관·공보문화 조직이지만, 경제산업성의 제조산업국 쿨재팬실, 해외공관의 공보문화원, 독립행정법인

I

II

III

IV

인 국제교류기금, 국제협력기구, 일본 정부관광기구 등이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외무성의 일개 조직에 불과한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를 조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보통국가노선과 국가브랜드 전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요시다노선을 포기하고 통상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본이 추구하려는 보통국가노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센카쿠제도 문제의 사례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립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평화국가, 문화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면 보통국가노선 하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공공외교는 무엇이며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브랜드는 무엇인지 전통외교와의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공공외교를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현대문화를 중심으로 아무리 공보를 강화해도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의 공공외교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져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무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로, 취약한 쌍방향성이다. 일본의 좋은 점만을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쌍방향성’이 중요한데, 현재 그와 같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NHK 국제방송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TV의 국제방송은 국제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일본은 이러한 점에서 압도적으로 뒤쳐져 있다. 현재 NHK의 국제방송은 외국인용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송 내용도 일본 국내의 방송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공공외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우선 공공외교 자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을 나름대로 구축한 정부의 노력이 가

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공외교의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성과를 ‘높다’라고 평가한 전문가는 없었고, ‘낮다’와 ‘매우 낮다’가 71.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낮은 것이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자국의 공공외교 성과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이다 3, 높다 4, 매우 높다 5)로 보았을 때, 미국이 평균 3.0556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일본은 2.0714로 중국의 2.7586, 러시아의 2.6250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국의 평균인 2.595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위에서 논의한 상황 하에서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일본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입장은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남북 대화에 의한 합의통일을 이상적인 통일 형태로 간주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일부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도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은 통일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통일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당분간 분단 상태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속내는 사실 비핵 현상 유지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한반도 정세의 희망사항인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국력 쇠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전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I

II

III

IV

보야 할 것이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프런티어분과회 평화 프런티어부회의 보고서이다. 동 부회는 2025년까지 일본을 둘러싼 전략환경이 일본에게 점점 더 불리해져 결국 일본의 존재감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평화창조국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적절한 방위력 구축,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의 여건과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인식과 판단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일본의 통일정책을 논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는 급격한 한반도 통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격한 통일은 지리적으로 최인접한 자국에게 예기치 않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케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과 같은 국력 쇠퇴기에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이 추진되거나 발생할 경우, 일본은 독자적이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자적인 한반도 통일관련 대응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그 결과 일본 정부는 미국 그리고 한국과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자국의 정책적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중국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한반도 통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관심은 특별히 높지 않다고 본다. 특히 최근 일본인들의 내부 지향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는 일본인들에게 흥미로운 것이 아니며 생각하기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식인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며 일본이 그를 위해 당장 나서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인들의 주 관심은 주로 납치문제, 미사일 문제, 핵개발과 6자회담 정도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통일과

정에서의 일본 역할은 제한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압도적일 것이며, 일본은 미국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부분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인의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추진세력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동일 가치를 추구하는 최인접국 일본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반대세력은 그 협력의 부정적인 파장을 주로 일본의 군사강국화와 중국 요소의 고려 등에 맞추면서 강조하고 있다.

향후 한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서 한국 측의 중국 요소 고려와 국내정서 설득의 진전 여부에 따라 그 속도와 수준이 결정되겠지만, 그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공공외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전문가 조사의 결과에서도 보여 주듯이 일본이 현재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을 예측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공공외교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뒤틀어진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또는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정치적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통일이라는 미묘한 문제를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이념체제를 같이 하는 이웃나라’로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고 한국을 지지하는 형태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공외교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한국 국민·북한 주민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해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일본인 납치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셋째,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 이전에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활발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일본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의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은 일본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 당국 및 주민들에게 일본의 기본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로 수상, 외무대신, 관방장관 등이 담화 등의 형태를 통한 공공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으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본부장으로는 수상이, 부분부장으로는 납치문제담당대신·내각관방장관·외무대신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무국을 두고 있다. 납치문제담당대신은 부분부장과 더불어 관계부성 연락회의 의장,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장을 겸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조직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가 있다. 이 조직은 2011년 9월 현재 전국의 33개 시도부현과 하나의 시에 39개소의 조직을 갖고 있으며, 납치 피해자 가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가 중심이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의 공공외교 내용을 보면 먼저 “한반도

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공공외교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외무대신의 담화를 통하여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평양 방문을 전후하여 고이즈미 수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2001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도 수상이 직접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인들을 향한 공공외교를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북한을 향한 라디오 방송인 ‘고향의 바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2006년 6월 제정된 ‘납치문제와 그 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북한 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을 정하여 강연회 등의 행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 문제』,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목표로: 북한 측 주장의 문제점』, 『가족분들의 메시지』라는 세 종류의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앞의 두 팸플릿은 각각 7개 국어, 4개 국어로 제작되어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대한 공공외교를 의도하여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앞에서 납치 희생자인 요코타 메구미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하고 있다. 만화의 외국어판은 한국어·중국어·영어의 3개 국어로 제작되어 각국의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을 통하여 배포되었고,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의 요인들에게도 배포되었다.

민간조직으로서 최대의 단체인 ‘구출하는 회’가 행하고 있는 주요한 공공외교로는 첫째, 2006년 2월에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북조선방송’을 지원하는 일본위원회를 발족시켜 계속 지원하고 있다. 둘째,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등도 참가하는 국민집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셋째, 북한에 의한 한국의 납치피해자 가족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한반도 공공외교를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납치피해자 가족들 혹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구출하는 회’가 주최하는 국민집회나 국제세미나에 초청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를 살펴보면,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과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체계와 운영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조직 및 기구	독도 문제	외무성 - 아시아 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납치문제	납치문제대책본부 - 납치문제담당대신 - 내각관방장관 - 외무대신
행위자	독도 문제	수상 외무대신 -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납치문제	납치문제 담당대신 납치피해자 가족

자원 및 수단	독도 문제	팸플릿 제작 홈페이지
	납치문제	라디오방송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몽주간 팸플릿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배포 국민집회 국제세미나

한편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일본의 공공외교 및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설문의 응답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반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 연구기관 인사와 한반도 문제를 취급하는 언론계 인사, 한국에 주재하는 기업인,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인사, 한반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NGO관계 인사들로 모두 일본인이다. 설문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여 설문지를 통한 답변과 설문지를 검토한 이후의 심층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는 설문을 통해서만 부족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설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질문함으로써 답변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설문지의 답변에 응하기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일본의 공공외교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고서의 내용에 반영하였다.

설문은 일본의 공공외교의 일반적인 질문을 비롯하여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본 공공외교의 일반에 대한 문항, 둘째,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설문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비롯한 관련 내용, 셋째, 일본이 수행하는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내용, 넷째, 현재 한국과 일본의 쟁점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의 전개는 일본의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성격과 특징을 파악한 이후 한반도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다. 설문 결과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일본의 공공외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관련 외교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프로그램 자체도 세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정리하여 그 특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공공외교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외교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기업과 민간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정부중심형의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로 경제단체나 문화단체보다는 정부부처를 꼽고 있다.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추진체계에 대한 응답에서 정부 중심이 가장 많아 민간 주도형과 혼합형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의 외교는 아직 전통적인 외교의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문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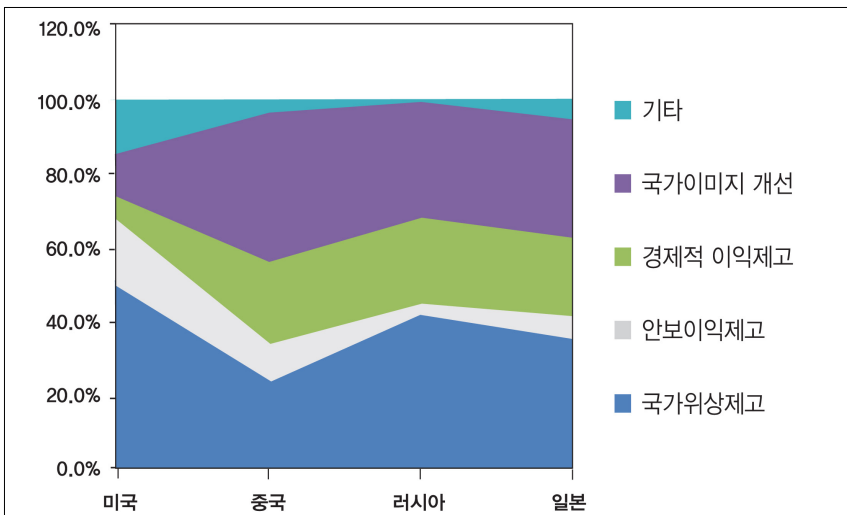
둘째, 일본은 경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외교에 상대적으로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산을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 IV-1>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일본이 경제적 자산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표 IV-4>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공공외교 주요 자산

의 1위로 꼽고 있는 것이 미국은 인적자산, 중국은 문화자산, 러시아는 문화자산을 꼽은 것에 비해 일본은 경제자산을 1위로 꼽고 있는 것이다.

〈표 IV-4〉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공공외교 주요 자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1위	인적자산	문화자산	문화자산	경제자산
2위	지식자산	경제자산	지식자산	문화자산
3위	경제자산	인적자산	스포츠자산	인적자산

〈그림 IV-1〉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공공외교 주요 목표



셋째,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공공외교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대일본 호감도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설문 결과 한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크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미국

I
II
III
IV

과 러시아에 비해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은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응답한 것이 많은 것을 보아,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반도 관련 정책은 일본과 직접 관련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설문에 북한의 핵통제를 중요한 사항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한반도 공공외교의 내용 중에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일본 정책의 이해를 중요한 내용을 응답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 납치문제와 한국민의 반일 감정 완화를 위한 공공외교의 사례를 보면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인 납치문제의 경우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고 눈에 보이는 사건에 대해 일본이 한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면, 사건의 일방적인 전달이나 단순한 내용의 전달과 같은 반응을 파악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보다는 관련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심포지엄과 같이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민의 반일 감정 완화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 홍보를 통한 일본 문화 이해, 혹은 유학생 유치라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시사점

(표 IV-5)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을 도출하게 만든 일본의 사례
정부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주도의 공공외교를 일관성 있게 추진	외무성을 중심으로 대외홍보와 국제문화교류 강화, 국제교류기금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추진
경제적 지원을 수단으로 한 공공외교의 추진의 필요성	ODA에 의한 지원을 수단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공외교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둠
목표가 합리적이고 분명해야 공공외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짐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외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목표설정의 좋은 예
공공외교의 사령탑의 필요성	다양한 부처가 공공외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율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효율성을 낳고 있음
정부가 NGO와 협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	극우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는 ‘구출하는 회’와 연계된 일본정부의 활동은 향후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한 정책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음
피드백에 의한 지속적인 전략 수정의 중요성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공공외교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공공외교의 특징으로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정부 중심의 공공외교가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국 공공외교의 목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엄밀히 말해 공공외교 지원 체제의 하나인 ODA를 공공외교의 주요한 수단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범국의 이미지를 씻고 국제사회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문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이미지 형성을 공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즉 문화 중시와 공보

중시의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과와는 별도로 NGO와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공공외교의 특징으로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한일 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본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공공외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중심적인 과제가 일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핵문제 해결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공공외교의 특징 및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주도의 공공외교를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전문가들조차 공공외교의 존재에 대해 크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정부 중심의 공공외교가 추진되고 있고 군국주의 이미지 탈피와 평화국가 이미지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워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IT혁명의 실현,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존재, 글로벌 미디어의 발달 등에 의한 세계적인 정보공유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하여, 글로벌하게 형성되는 여론, 즉 ‘세계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새로운 국제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중의 힘(People’s Power)이 외교문제에 대해 관여하게 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국내 여론의 방향성을 정하고, 외교정책을 보다 제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은 각국의 주요 오피니언 메이커와, 더 나아가서는 그 저변에 존재하는 각국의 ‘퍼블릭(公衆)’에 대하여, 일본의 생각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설명하는 공공외교(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지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하는 인물교류와 과제해결형의 대화·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 정책을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하여 대외 홍보와 국제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국제교류기금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였다.

둘째, 공공외교와 경제적 지원의 밀접한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공공외교에 대한 이미지는 ODA에 의한 지원이다.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및 자산을 경제적 기여와 경제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요 담당자의 하나로 꼽은 것이 경제단체이다.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일본의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이 동아시아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ODA지원은 매우 지대하다.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ODA를 추진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ODA지원으로 일본의 생산네트워크 형성과 확대, 경제적 이익 증진, 안정된 해양 교통 확보, 천연자원의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2010년 ‘신성장전략’과 함께 발표된 ODA 개정안은 ODA를 활용하여 일본의 경제 발전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서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쿨재팬’도 경제적 이익과 깊이 관련짓고 있다. 주요 대상국인 한국과 중국에 대해 시장 규모의 신장이 그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셋째,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목표가 합리적이고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면 공공외교의 방향 설정, 피드백에 의한 평가 등 공공외교 전 과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공공외교가 그 좋은 예이다. 과연 이와 같은 공공외교가 그들이 원하는 납치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납치문제는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측은 2002년의 북일정상회담에서 국교정상

화교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일본 측의 요구에 응해, 국제적인 오명을 뒤집어쓸 각오를 하고 납치사실을 ‘고백’했던 것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 북일국교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기대와는 반대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서, 북일국교정상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되었다. 현재 납치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는 북한 측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일본측에 전달한 8명의 납치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인데, 분명히 부자연스러운 이들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다시 한 번 북한에게 새로운 ‘고백’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최초의 ‘고백’에 의해 당초 상정한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이 새로운 ‘고백’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본다면 납치문제는 사실 공공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북한과의 물밑교섭이 필요한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에 떠밀려,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인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납치피해자들의 구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진지한 고려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납치문제와 관련된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공공외교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넷째,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외교를 조율하는 사령탑에 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 공공외교의 중심은 외무성의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이다. 그렇지만 경제산업성의 제조산업국 클재팬실, 해외공관의 공보문화원, 독립행정법인인 국제교류기금, 국제협력기구, 일본 정부관광기구 등이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부처의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무성의 일개 조직에 불과한 외무보도관·공보문화조직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를 조율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공공외교를 펼침에 있어서 공보문화외교라는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보문화외교의 관점에서 전형적인 공공외교의 방식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한 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의 경우, 사령탑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공공외교를 보면 사령탑의 부재로 인하여 그다지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인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의 경우에도 수상관저의 홈페이지에서는 일본어 파일만이 제공되는 데 비해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10개 국어로 된 파일이 제공되고 있다. 전 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외교에 있어서 NGO와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 위험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납치문제에 있어서 ‘구출하는 회’의 집회에 수상과 대신이 참여하는 등 깊은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구출하는 회’의 지도부가 일본 내에서도 가장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일본 정부의 공공외교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개연성도 있는 것이다. ‘구출하는 회’는 현재도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북한과 어떤 타협을 시도할 경우, 이 조직은 그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시에는 그 단체의 성격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여섯째, 피드백에 의한 지속적인 전략 수정의 중요성이다. 이것은 일본 공공외교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이다. 납치문제에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낳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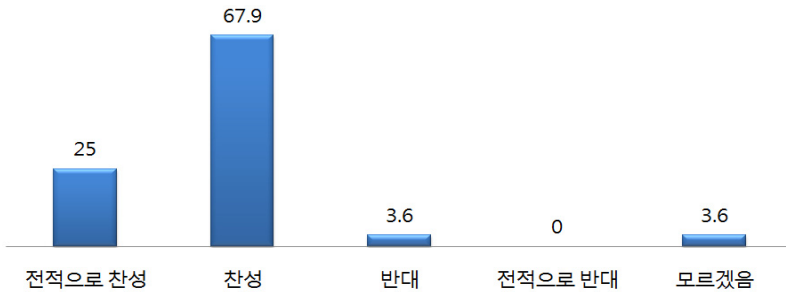
III

IV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단파방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외국의 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공공 외교를 행했지만, 애초에 정치문제 등에 관심이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한 젊은 학생들이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의 공공외교에 있어서 일본의 뛰어난 점만을 발신하기보다는 상대방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그림 IV-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67.9%가 ‘찬성,’ 25%가 ‘전적으로 찬성’하여 전체의 92.9%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2〉 상대국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

(단위: %)



3. 대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과제

(표 IV-6) 대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과제

과 제	세부내용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	통일과 관련해서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같은 일본이 원하는 사안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과 같은 공공외교 추진이 필요
정책목표와 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통일이 일본의 안보에도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일본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일본 국민들은 한반도의 유사사태가 일본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한반도 통일을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북한 핵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도 통일을 통하여 해결된다는 점을 홍보	일본에 대한 공공외교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통일에 의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다지게 됨.
대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	공공외교 전체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두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NGO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이 필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NGO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일본에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을까?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성 등을 통해서 기늩해 보자.

첫째, 한반도 통일에 관한 대일본 공공외교 정책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

I
II
III
IV

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일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목표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관련 자국의 정책이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문제 관련 자국의 정책 이해’보다 높은 응답률이다. 즉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과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관한 대일본 공공외교 정책의 목표와 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은 매우 유동적이고 상황 대응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통일정책 및 이에 대응하는 대일본 공공외교를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보는 시각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일본의 협조를 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은 물론 일본의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질서 안정에 매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듯이, 일본의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와 정세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일본 국민들에게는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학계와 전문가들의 모임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게 해야 한다. ‘평화병’에 걸려 있는 일본 국민들은 한반도의 긴장과 유사사태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나 납치 문제 등도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들은 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외교를 통하여 이 사안들이 한반도 통일에 의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와 같은 공공외교가 성공을 거둘 경우 그것은 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상의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일본은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부처의 부재로 인하여 공공외교의 원활한 추진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교 담당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전체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처를 두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이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정부의 여러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NGO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공공외교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국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정책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큰 경우도 있다. 특히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일본 정부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정책을 한국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의 뒤틀린 역사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 개입을 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과거와 역사적 문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NGO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대일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매우 민감하고 국가 전체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핵문제 등과 같은 것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 등과 같은 문제는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대일본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하리 스스무. “한일관계와 공공외교.”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엮음.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파주: 한울, 2012.
- 김영명. 『일본의 빈곤』. 서울: 미래사, 1994.
- 나카니시 히로시. “세계정치의 구조변화와 한일협력의 의의.” 하영선·오코노
기 마사오 엮음. 『한일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파주: 한울,
2012.
- 다나카 아키히코. 『중국의 대두와 한일 협력』.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엮음,
『한일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파주: 한울, 2012.
- 다나카 아키히코·이원덕 옮김.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중심, 2002.
- 박명규 외. 『2010 통일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 이면우. 『현대 일본외교의 변용과 한일 협력』. 파주: 한울, 2011.
- 히라이와순지.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협력.” 하영선·오코노기 마사오 엮음.
『한일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파주: 한울, 2012.

Kenneth B. Pyle. *Japan Rising*. New York: Public Affairs, 2007.

- 渡辺靖. 『文化と外交』. 東京: 中央公論新社, 2011.
- 毛利和子. 『日中關係』. 東京: 岩波新書, 2006.
- 森本 敏. 『日本のせとさい』. 東京: 實業之日本社, 2011.
- 渡辺靖. 『21世紀日本外交の課題』. 東京: 創風社, 2008.

2. 논문

-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일본연구팀. “일본은 소위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週刊國防論壇』. 제1427호, 2012.
- 기미야 다다시.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통일과평화』. 제3집 1호 (서울

- 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 김성환.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공조의 방향.” 『新亞細亞』. 2011년 겨울호 (신아시아연구소), 2011.
- 김준섭. “일본의 유사법제의 성립과 동북아 안보.” 『日本學報』. 제60집 (한국일본학회), 2004.
- 스즈키 유코. “국민기금 문제란 무엇인가.” 제1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 한일모임 발표논문, 2008.
- 와다 하루키. “아시아여성기금문제와 지식인의 책임.” 한일연대21 제2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5.
- 이노구치 다카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통일연구원), 2011.
- 이명찬. “일중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해양연구』. 제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2.
- 이상우.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新亞細亞』. 2011년 가을호 (신아시아연구소), 2011.
- 정기웅·윤석상. “일본 공공외교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안보전략연구소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조양현. “동아시아 역사논쟁과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논의.” 『한일민족문제연구』. 제524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 최장근. “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토전략.”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 クールジャパン官民有識者会議. 『新しい日本の創造-「文化と産業」「日本と海外」をつなぐために』. 2011.
- 南昌熙 外. “北東アジアにおける同盟變革と日韓 安保協力.” 『國際安全保障』. 제40권 2호, 2012.
- 道下徳成. “戰略的な對北朝鮮政策を考える.” 『外交』. Vol. 3, 2010.
- 木村秀美·戸堂康之. “開發援助は直接投資の先兵か? 重力モデルによる

- 推計.”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7-J-003, 2007.
- 三上貴教.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研究の射程.” 『修道法学』. 第27卷
2号 (修道大學), 2007.
- 星山隆. “日本外交と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 『IIPS Policy Paper
334.J』. IIPS, 2008.
- 阪田恭代. “擬似同盟としての日韓安全保障協力.” 2012년도 일본국제정치
학회 발표 논문.

3. 기타자료

- 2012년도 일본국제정치학회 일한안전보장협력 세션.
『TV조선』.
- 일본 한반도 전문가 미치시타·사카다·아쿠츠·오카자키(리치메이칸대 교수)
와의 면담.
- 『중앙일보』.
- 『한국일보』.
- 『讀賣新聞』.
- 『産經ニュース』.
- 『産經新聞』.
- 『時事通信』.
- 『外交青書 2004』.
- 国際交流研究会. 『新時代の外交と国際交流の新たな役割』. 2003.
- 国際協力機構. 『国際協力機構年報 2009』.
- 文化外交推進に関する懇談会. 『「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 2005.
- 外務省. 『慰安不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施策 平成19年4月』. 2007.
- 日本国際交流基金. 『日本国際交流基金資料』. 2012.
- 片岡貞治. “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外交の方向性(日米同盟等).” 『東日本
大震災後の日本外交の方向性』. 早稲田大学国際戦略研究所 早稲
田大学, 2002.

海外交流新議會答申. 『我が国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施策と体制』. 2008.

KACE시민참여센터홈페이지 <<http://kace.org>>.

日本國際交流基金홈페이지 <<http://www.jpf.go.jp/j/index.html>>.

日本國際協力機構홈페이지 <<http://www.jica.go.jp>>.

日本外務省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nnai/honsho/sosiki/>>.

日本政府觀光局홈페이지 <<http://www.jnto.go.jp/jpn/>>.

平和のフロンティア部會, 『平和のフロンティア報告書: 平和の包括的な
創り手として』 <<http://www.npu.go.jp/policy/policy09/pdf/20120706/hokoku5.pdf>>.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중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웅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C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중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중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총괄보고서)
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